열린사회포럼 발제 (2024. 10. 10)

연금개혁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윤 석 명(尹錫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금연구회 리더
리셋코리아 연금분과장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E-mail: smy1985@kihasa.re.kr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 국내외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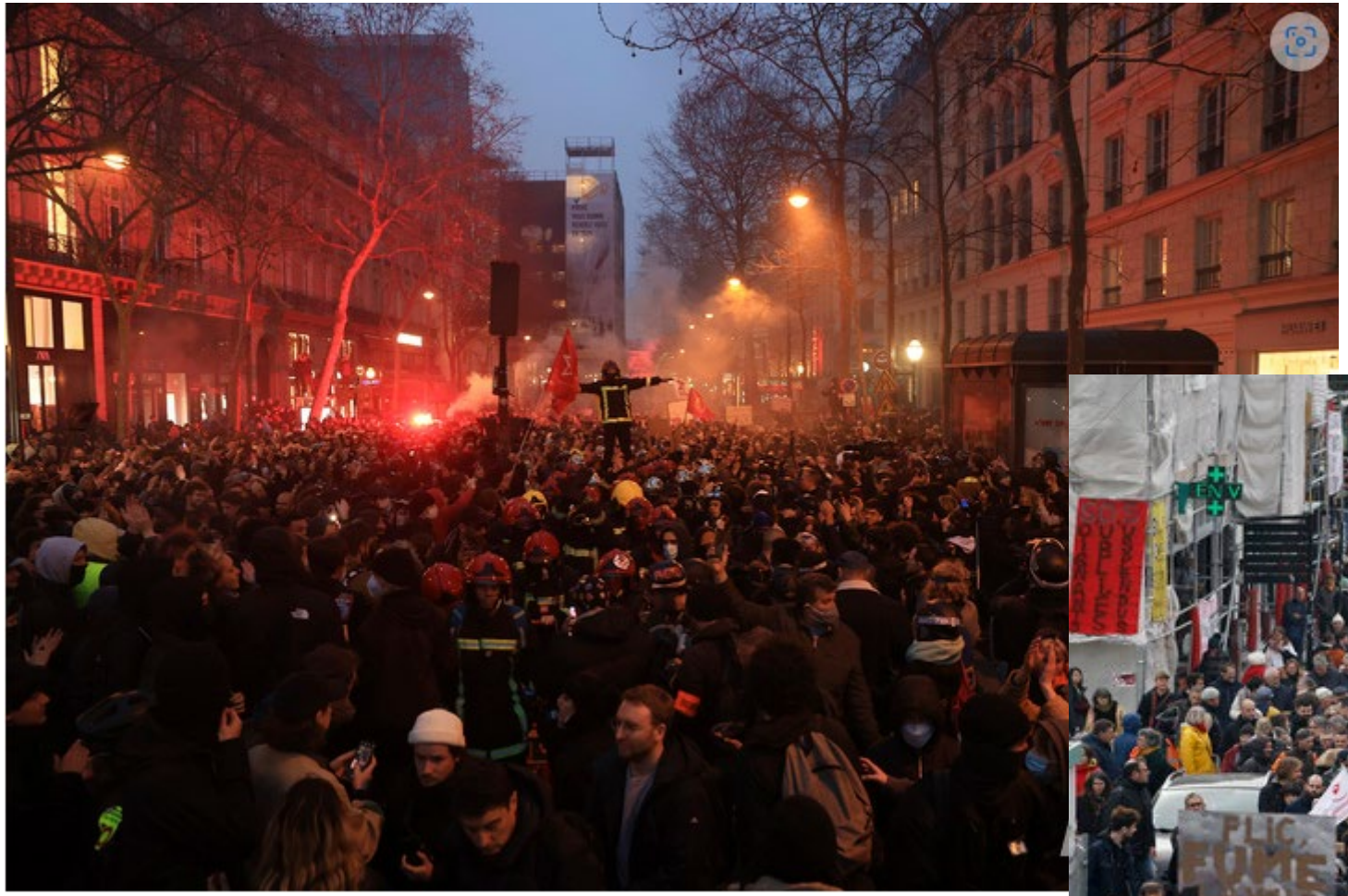
그리스에서의 연금삭감 반대 시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Széll - KIHASA 2012

그리스, 아테네의 연금삭감 반대 시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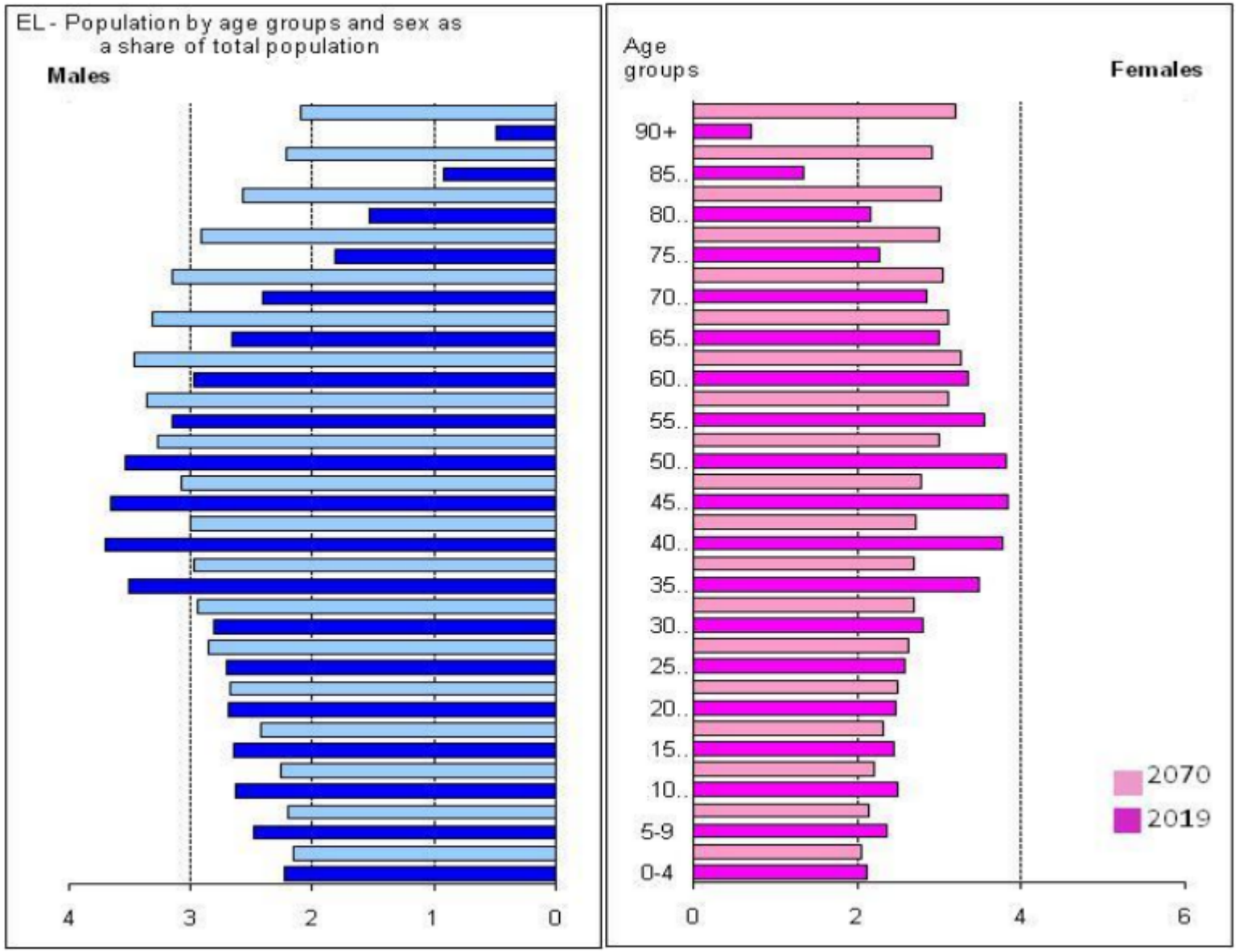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시위 (20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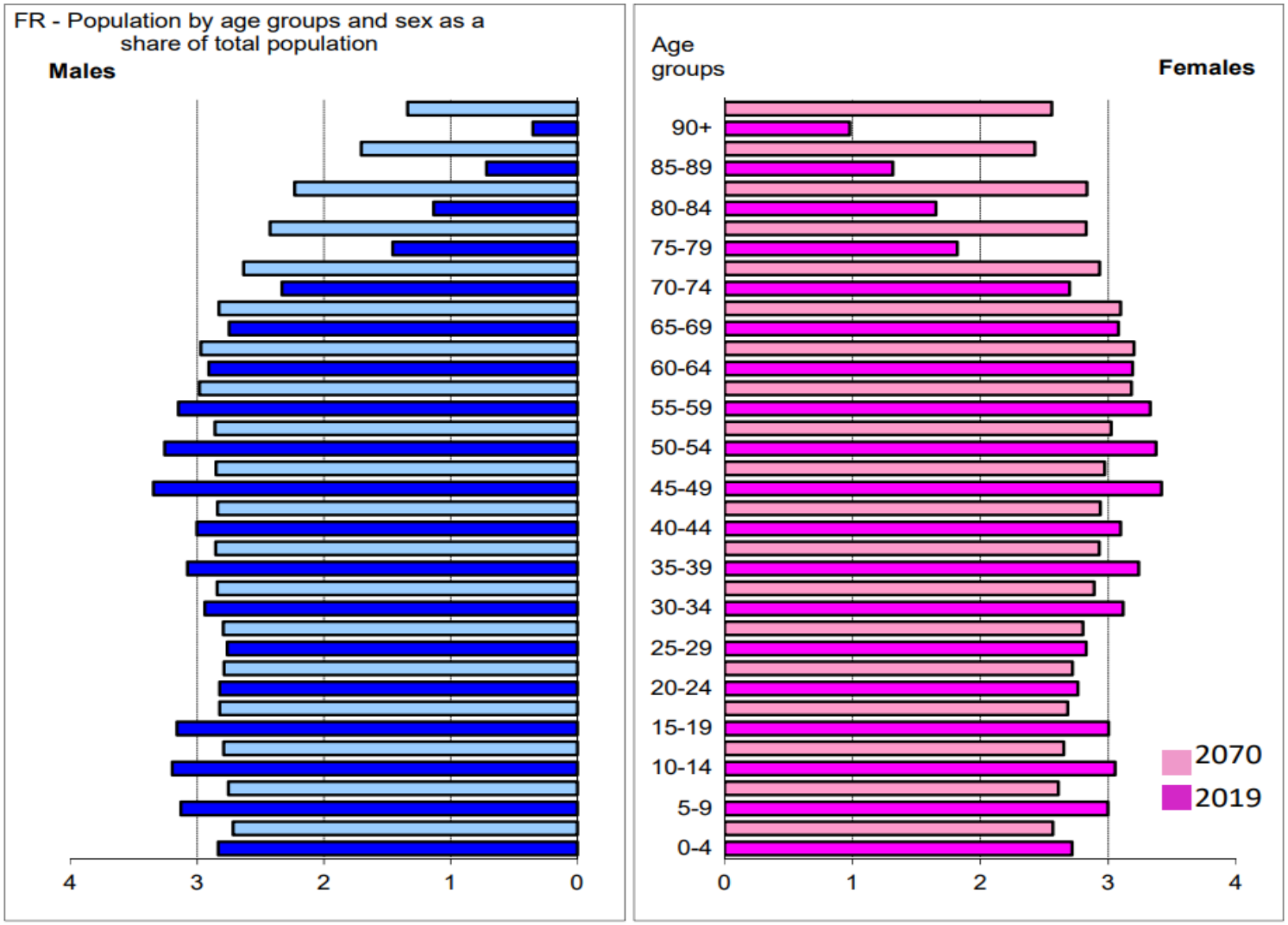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시위 (2014-15)

그리스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19 - 2070년)



출처 : Greek National Actuarial Authority, 2021.

프랑스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19 - 2070년)



Source: Commission services based on Eurostat EUROPOP2018 data

프랑스와 우리의 연금개혁 시급성 비교

□ 2023년 프랑스 연금 개혁의 핵심은

- ○ 현행 정년퇴직 연령인 62세를 64세로 연장하는 것과 그렇게 늘어난 근로기간을 이용해서,
- ○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부담금 기여기간을 42년간에서 43년간으로 늘리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 (1년 농사를 지으면 2년을 먹고 살수 있는 나라임에도) 연금재정에 숨통을 틔우려는 것임 .

□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연금 개혁을 통해 절약하려는 금액이

- ○ 2030년 기준으로 연간 20조원 정도라고 함.

□ 우리나라는 126만명 대상 공무원연금의 2023년 적자 보전액만 6조 1천억원으로 예상됨.

- ○ 어느 나라 연금문제가 더 심각할까?

프랑스의 연금 수급 요건 (2023년 연금개혁 이전)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 contribution years *	statutory retirement age **	67,0	67,0	67,0	67,0	67,0	67,0
	earliest retirement age	62,0	62,0	62,0	62,0	62,0	62,0
	penalty in case of earliest retirement age	25,0%	25,0%	25,0%	25,0%	25,0%	25,0%
	bonus in case of late retirement ***	0,0%	0,0%	0,0%	0,0%	0,0%	0,0%
40 contribution years *	statutory retirement age **	63,8	64,5	65,0	65,0	65,0	65,0
	earliest retirement age	62,0	62,0	62,0	62,0	62,0	62,0
	penalty in case of earliest retirement age	8,8%	12,5%	15,0%	15,0%	15,0%	15,0%
	bonus in case of late retirement ***	16,3%	12,5%	10,0%	10,0%	10,0%	10,0%

출처 : FRANCE . PENSION PROJECTIONS FOR THE 2021 AGEING REPORT, 2021.

프랑스의 연금가입 및 수급기간 관련한 주요 지표 (남성 기준, 2023년 연금개혁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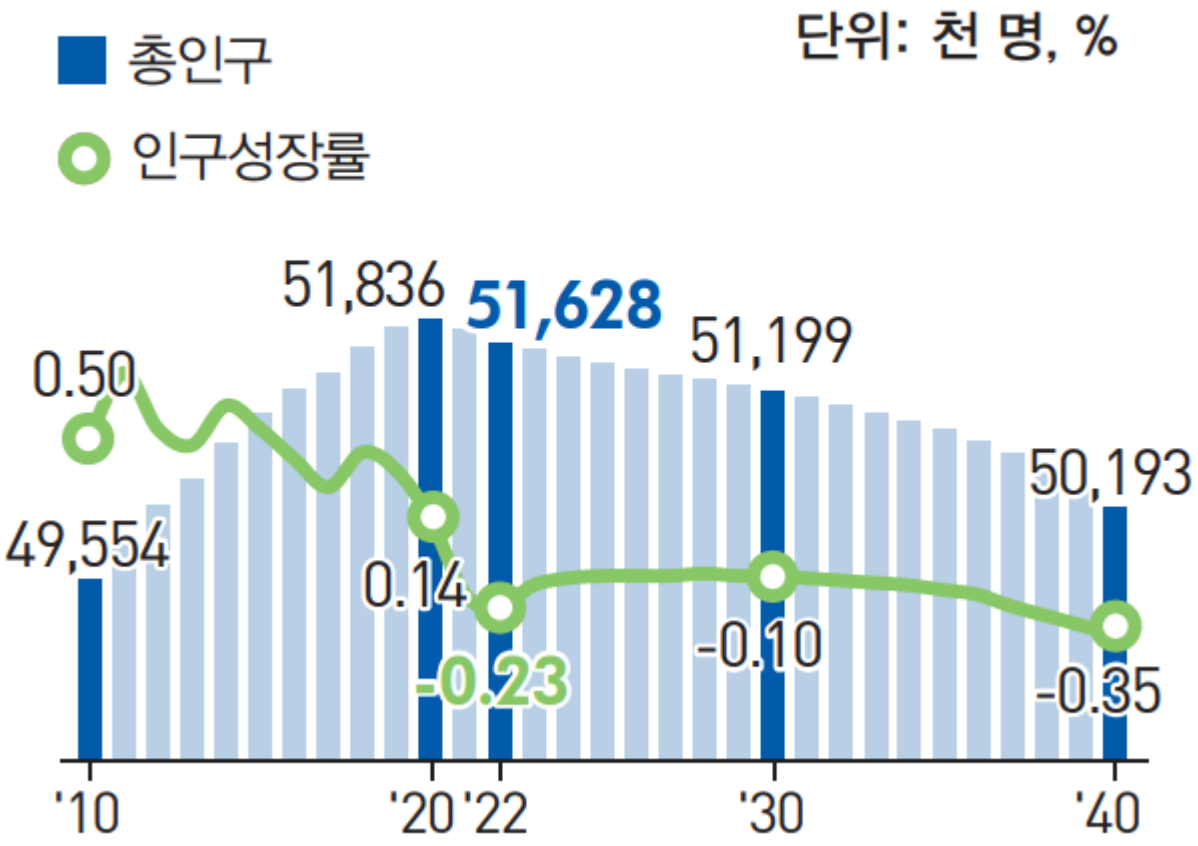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peak value	peak year	change 2020-2070
Average effective retirement age (administrative data)*	62,0								
Average labour market exit age (CSM)**	62,3	63,6	64,5	64,7	64,7	64,7	64,7	2042	2,4
Contributory period	38,3	33,8	34,9	34,8	34,2	34,6	38,3	2020	-3,7
Duration of retirement***	22,2	21,6	22,6	22,6	23,5	24,2	24,2	2069	2,0
Duration of retirement/contributory period	0,6	0,6	0,6	0,6	0,7	0,7	0,7	2069	0,1
Percentage of adult life spent in retirement****	33,4	32,1	32,7	32,6	33,5	34,1	34,1	2069	0,8
Early/late exit*****	7,8	3,4	1,9	1,6	1,5	1,4	7,8	2020	-6,4

Source: Commission services; Insee, DESTINIE model, calculations: DG Tré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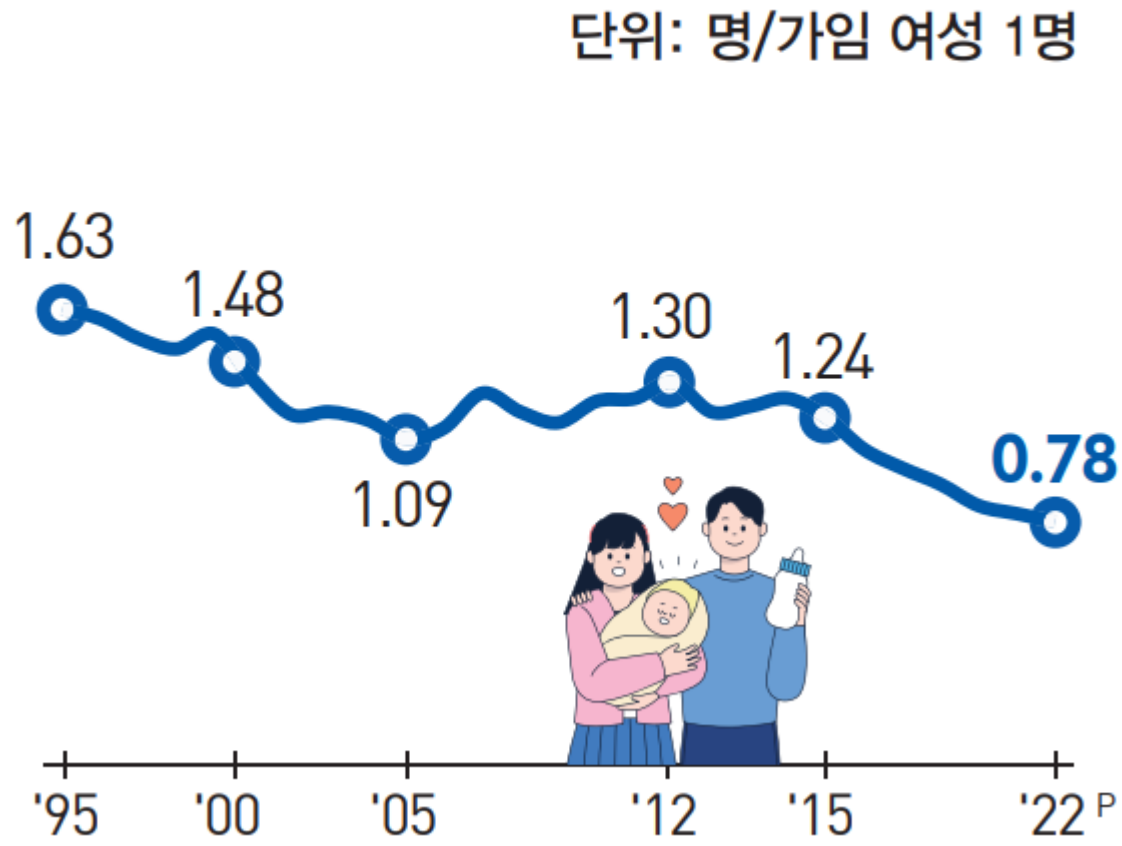
2. 인구전망 국제 비교: 우리가 처한 현실

한국의 총인구와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총인구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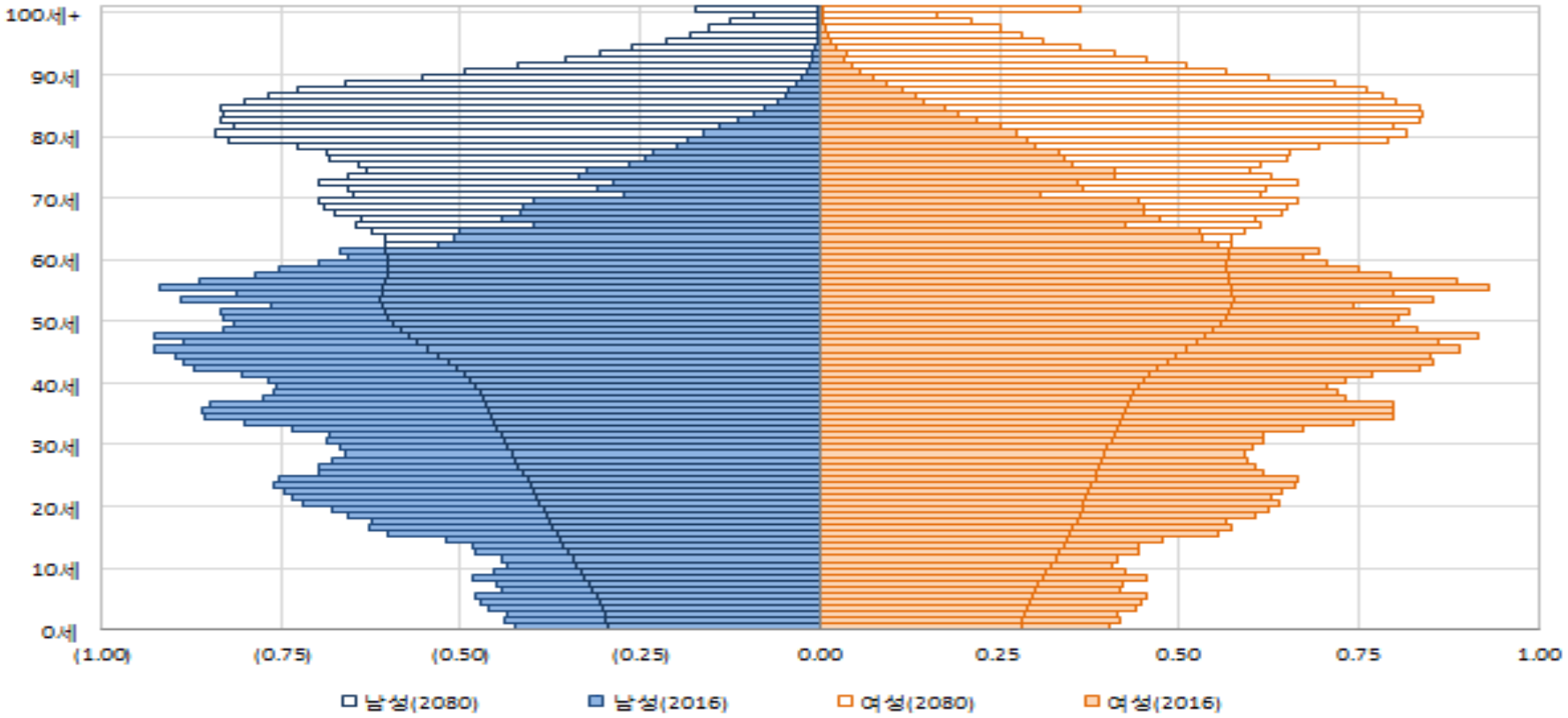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6년과 2080년 비교** (전체 인구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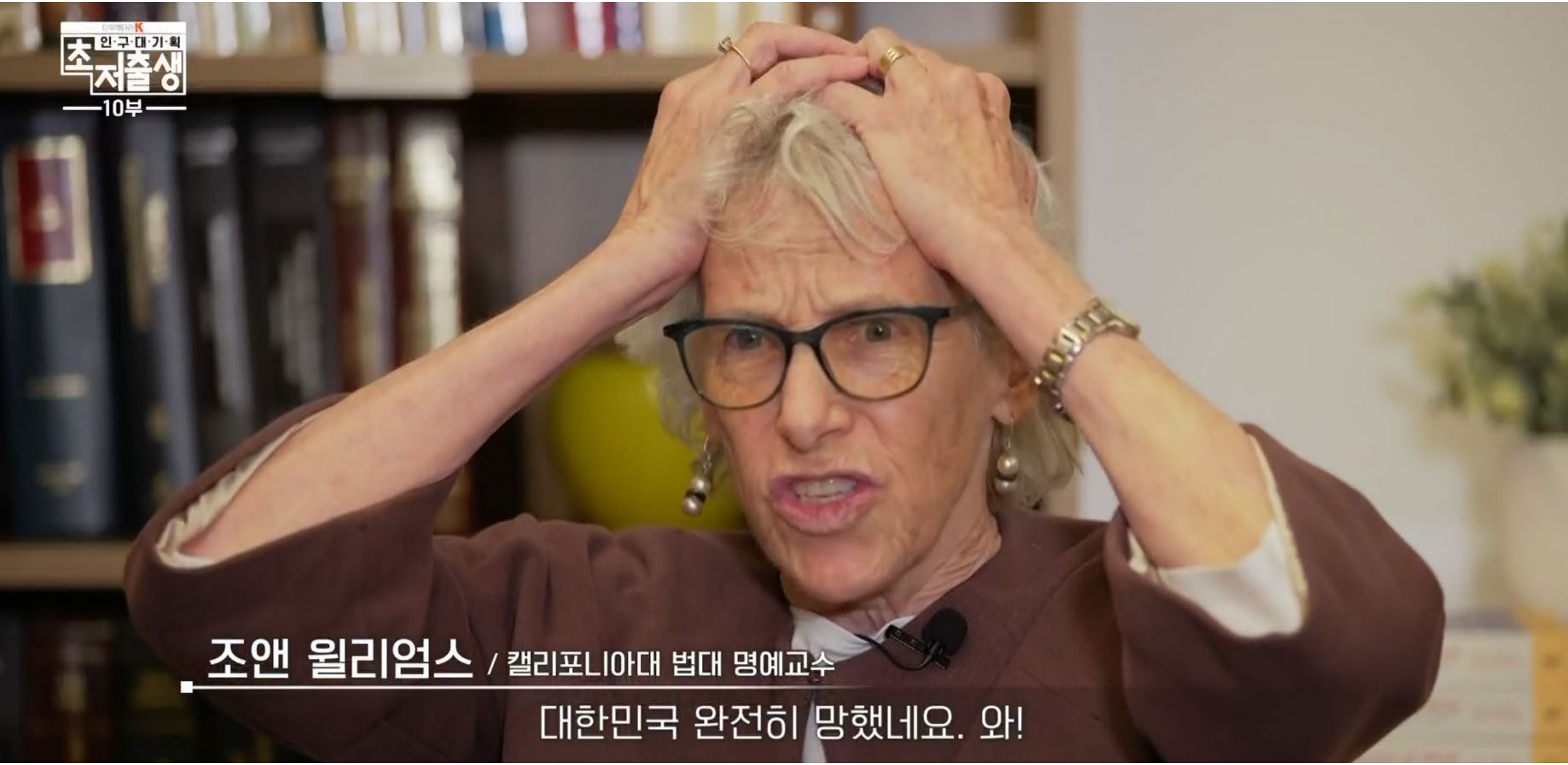
내 평생 이런 (한국) 인구변화 추이는 처음 봤다 (스위스 로잔대의 **보놀리 교수**)

그러한 한국에서는 극단의 낙관주의 팽배 – 걱정도 팔자야! 세금 걷어서 주면 되지!



원자료 : kosis(http://www.kosis.kr/statisticsList)에서 2021.5.10. 인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작성. 신화연(2022) 재인용.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TFR)이 0.78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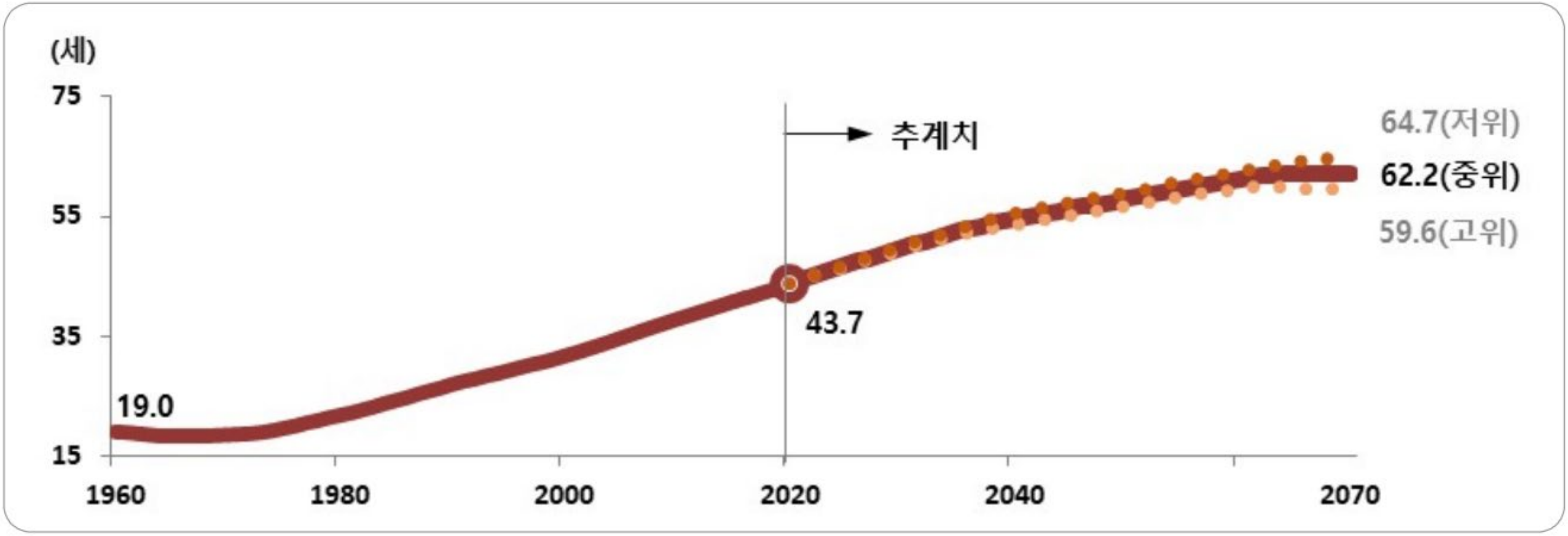


출처 : EBS TV, 초저출생 10부 0.78 이후의 세계 PART 2

Why Korea is Dying Out - Kurzgesagt

출처 : 22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 (Kurzgesagt)'는 10월 4일 ' 한국은 왜 망해가는가 ' (Why Korea is Dying Out)라는 제목의 영상 게재. 유튜브 썸네일 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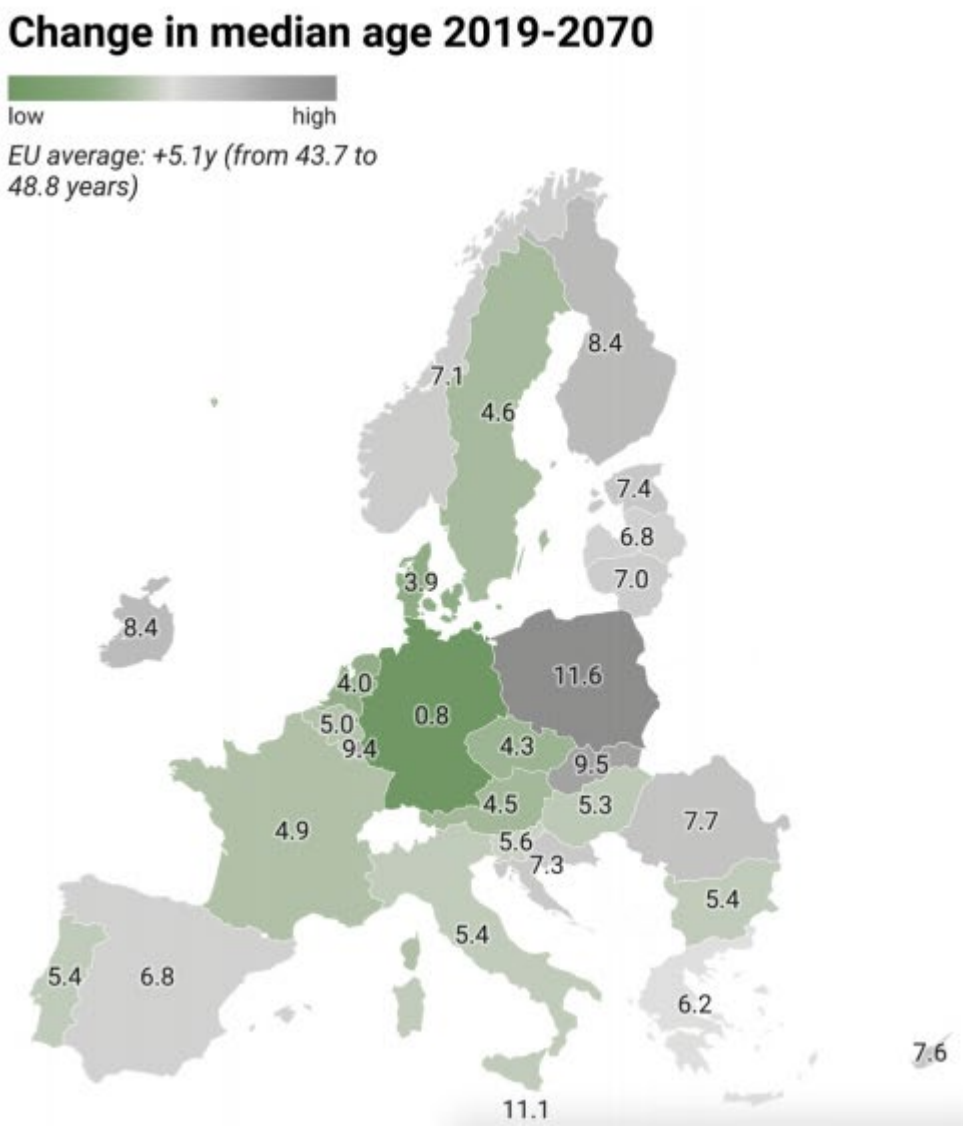
한국의 중위연령 변화 추이 (1960 - 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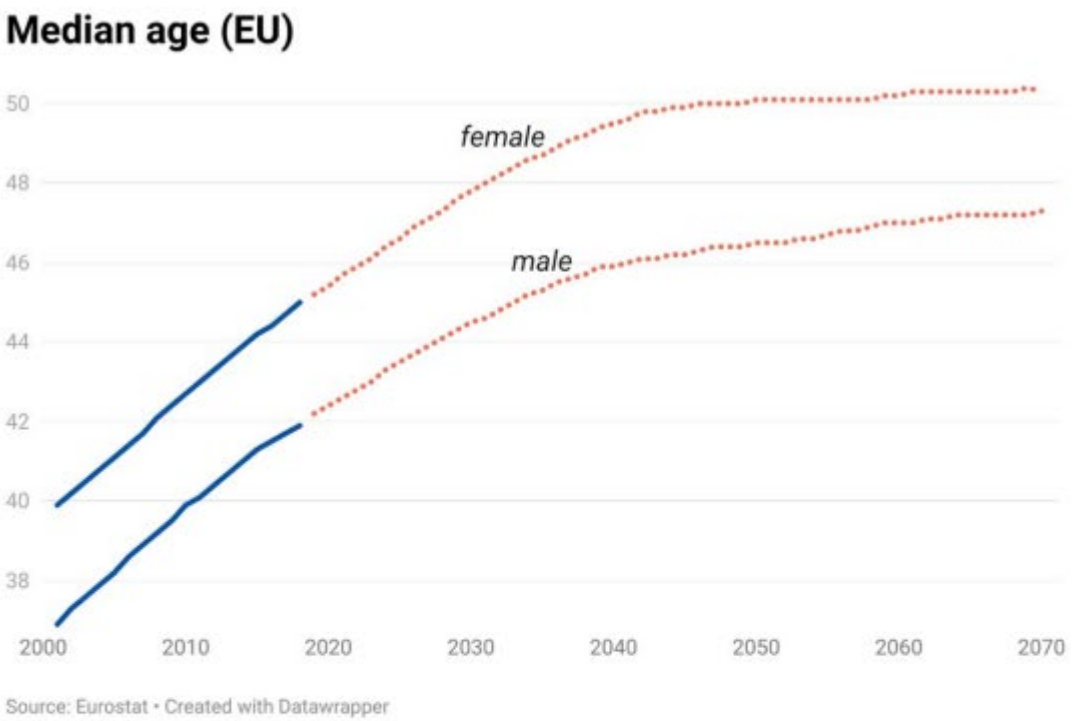


주 : 중위연령 변화 추이 : 43.7세(2020년) - 62.2세(2070년). **중위연령이 18.5세 증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48쪽

EU, 2021 Ageing Report: Ageing populations and fiscal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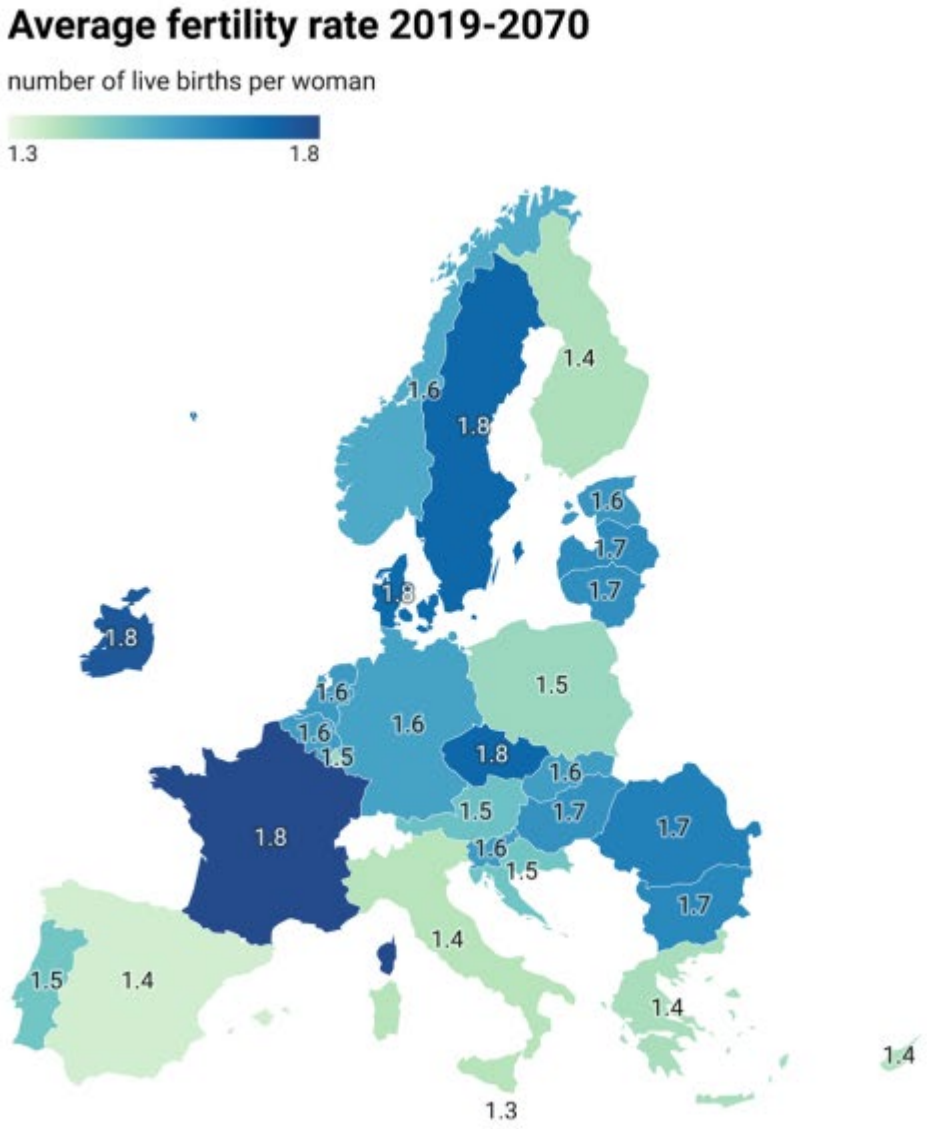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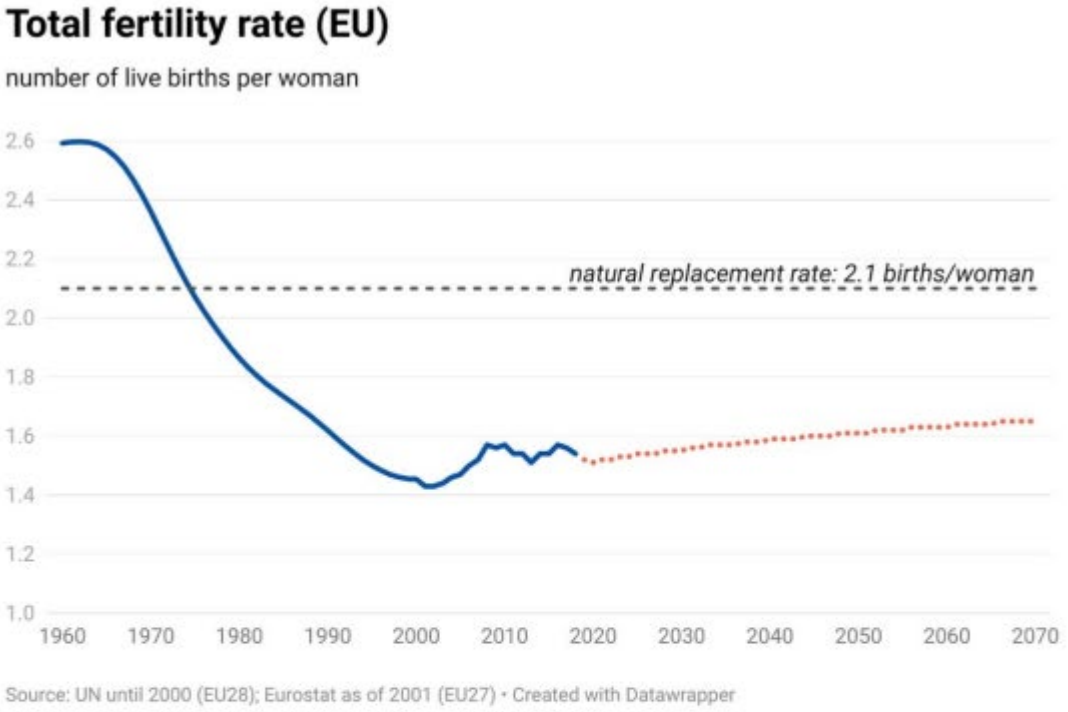
EU 회원국 평균: 중위연령 5.1년 증가
(2019년 43.7세에서 2070년 48.8세)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1.

European Commission

EU, 2021 Ageing Report: Ageing populations and fiscal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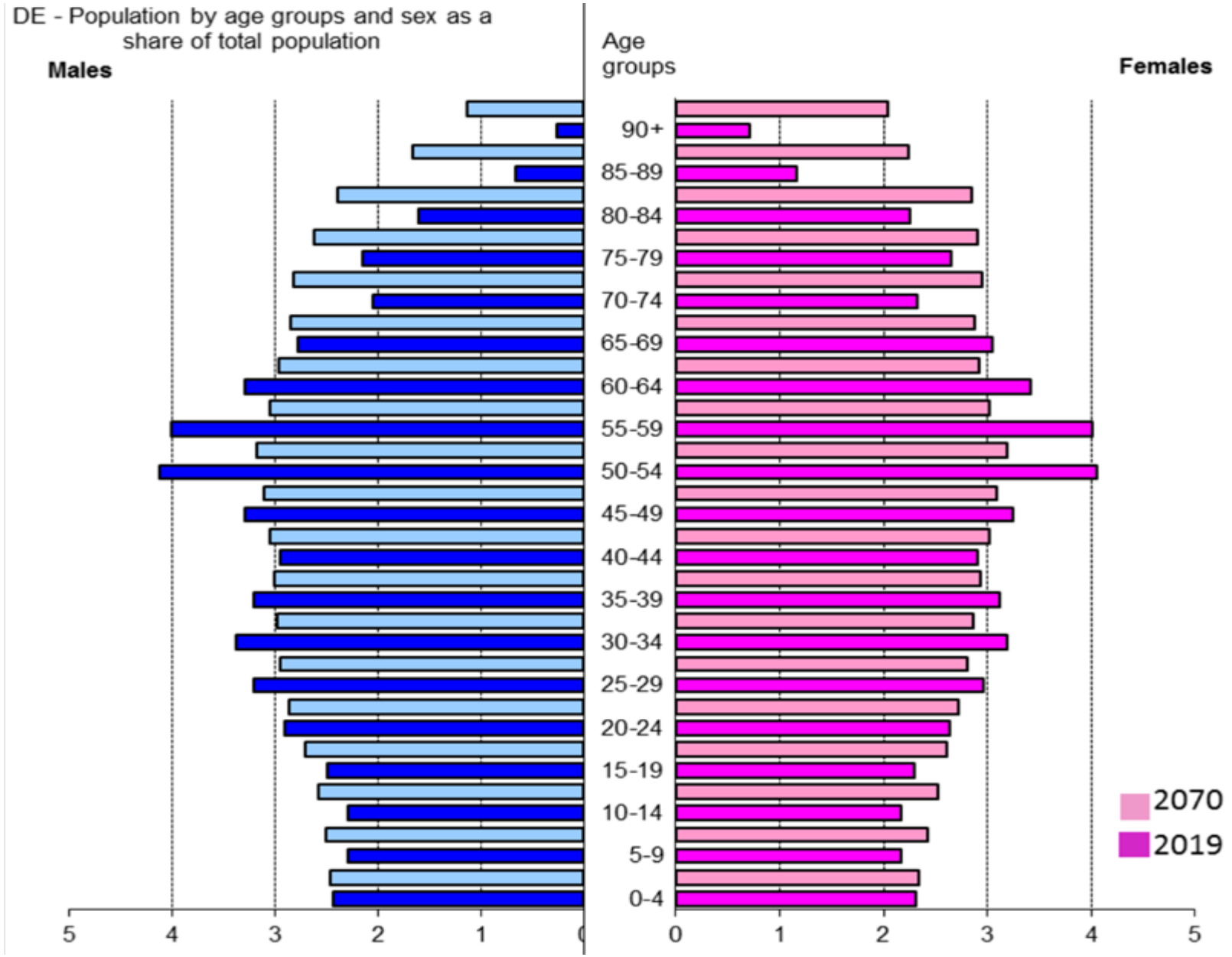


EU 회원국은 2019년부터 2070년까지
평균적인 합계출산율이
1.3에서 1.8 사이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1.

European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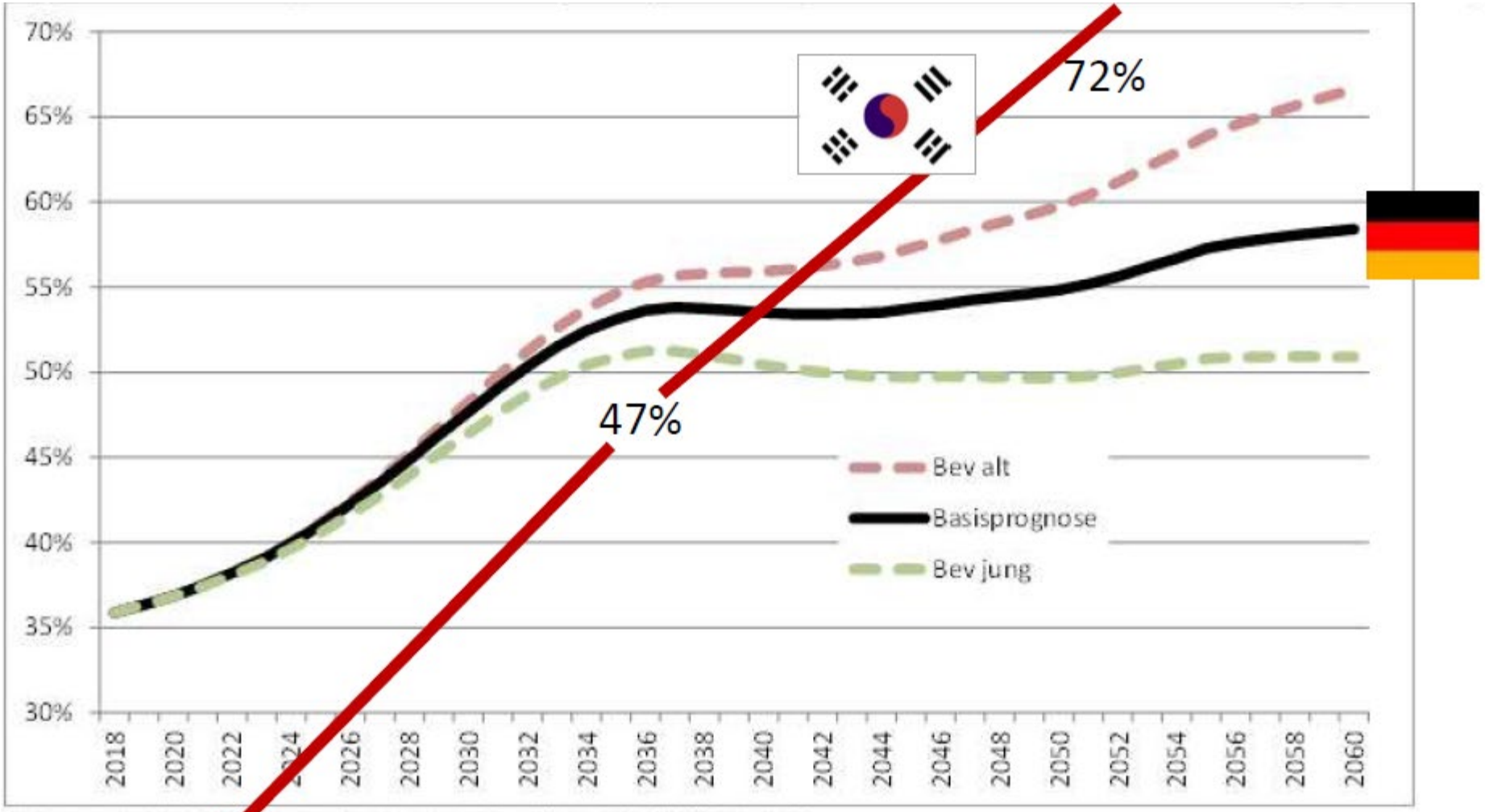
독일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19 - 2070년)



출처 : Eurostat (2019) and Commission Services.
독일 정부가 EU에 제출한 연금 장기 전망 자료에서 재인용

한국과 독일의 노인 부양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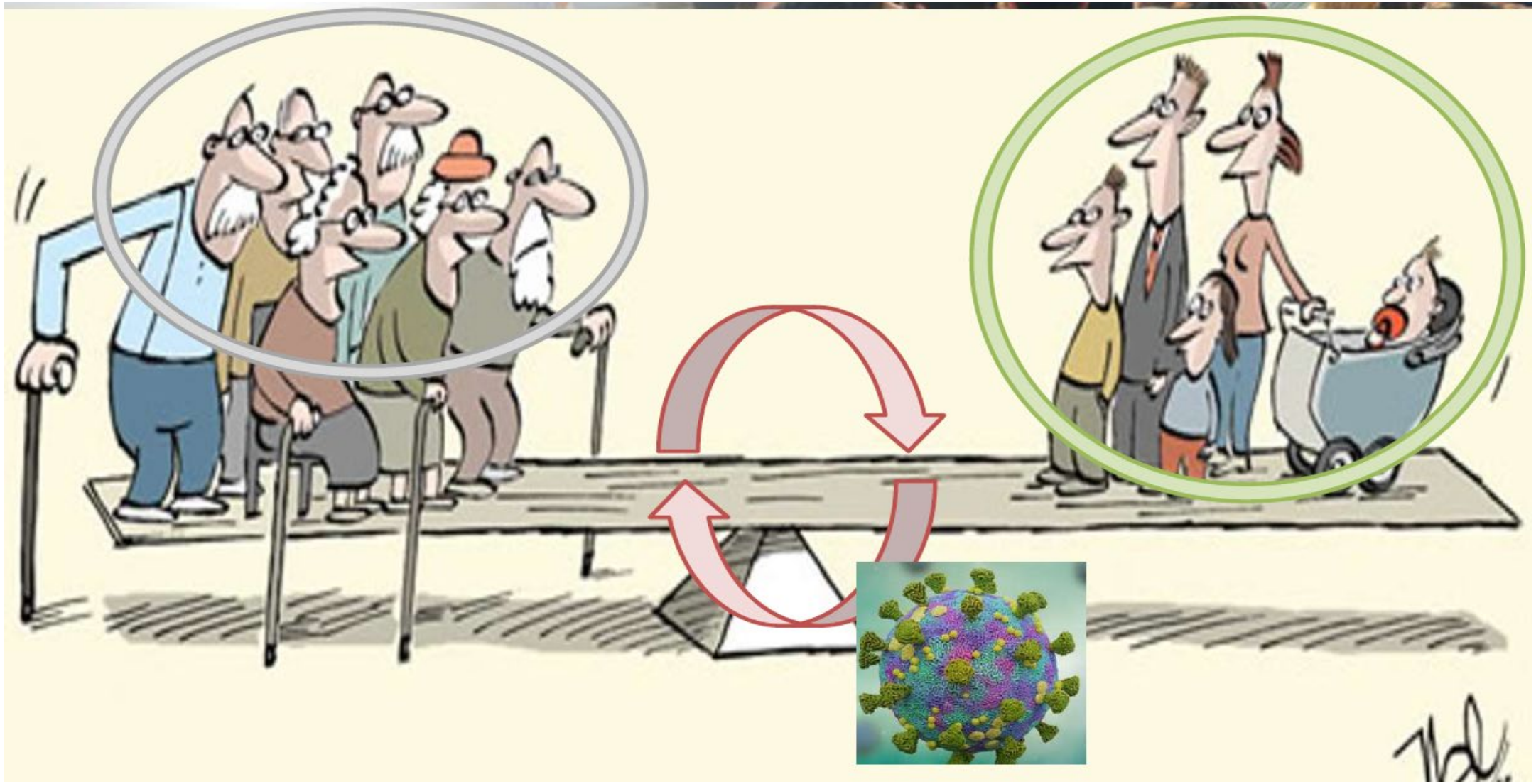
(**Axel Boersch-Supan**, May 2022)



Source: Own calculation based on the MEA-PENSIM model.

Note: The figure shows the development of the old-age dependency ratio (population aged 65 and over as a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20 to 64) in three forecast variants of the Federal Statistical Office: old, middle and young total population.

(독일) 연금제도의 세대간 & 세대내 소득재분배 (눈치,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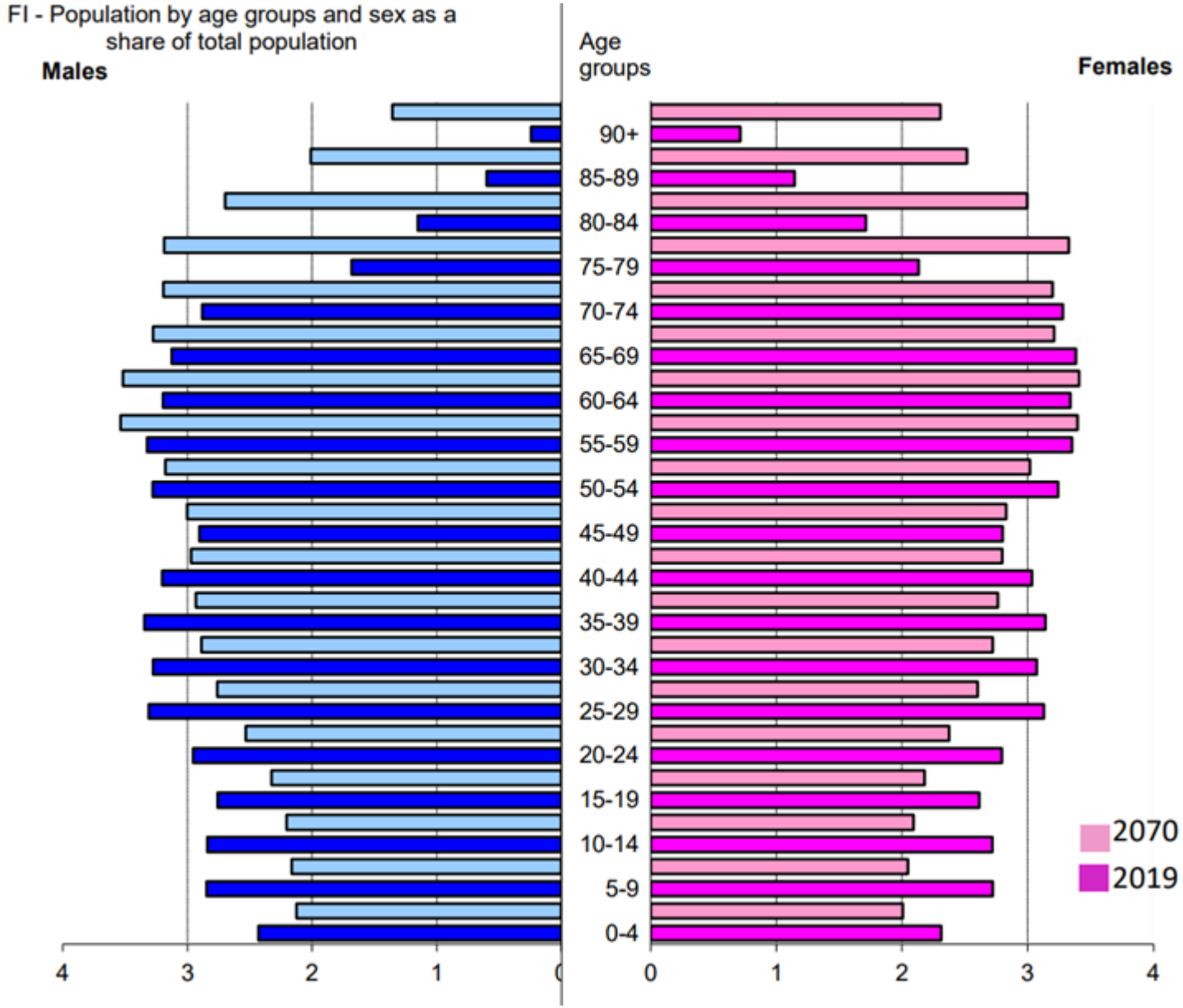
Source : **Axel Boersch-Supan** (May 2022)

독일의 연금 관련 주요 지표 (RR, Replacement rate at retirement, 2019-2070)

연도		2019	2030	2050	2060	2070
법정퇴직연령		65/8 (2020년)	67	67	67	67
연금가입기간		-	-	-	-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RR, Replacement rate at retirement)		40%	38%	37%	37%	37%
연금제도 부양비		54.0	64.6	71.7	72.9	73.1
노인 부양비		36.1	46.4	52.8	54.3	54.6
평균 연간 연금급여승률 [Average accrual rate (points/year)] (남녀 평균)		0.80	0.82	0.86	0.89	0.88
보험료 (직장 근로자)	근로자	9.6	-	-	-	-
	사용자	9.6	-	-	-	-
보험료 (자영자)		18.6	-	-	-	-

출처 : Eurostat (2019) and Commission Services.
독일 정부가 EU에 제출한 연금 장기 전망 자료에서 재인용

핀란드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19 - 20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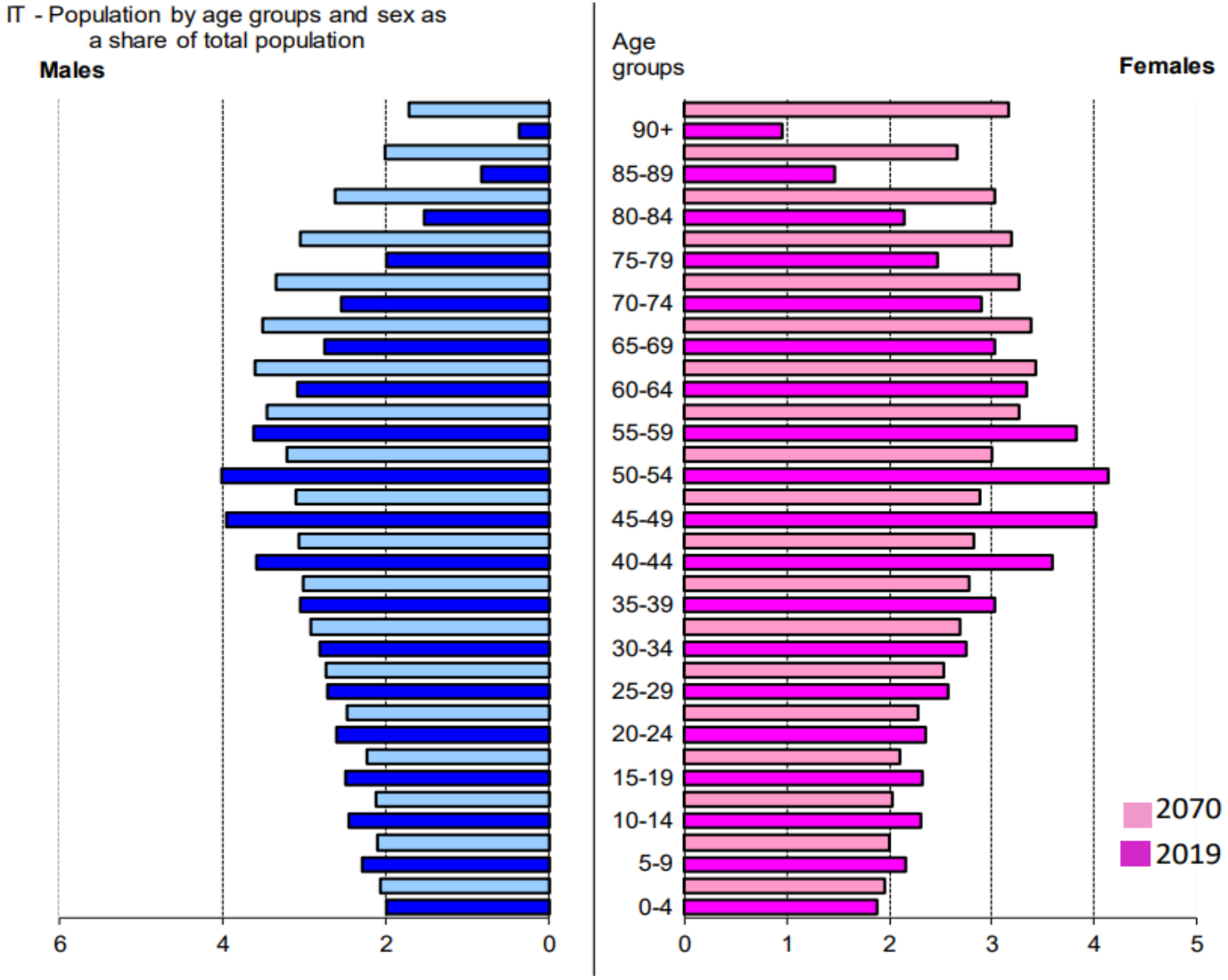


출처 : EU (2019), 핀란드 정부가 EU에 제출한 연금 장기 전망 자료에서 재인용

핀란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 인식

거친 물살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

이탈리아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2019 - 2070년)



이탈리아의 마리오 (발표자 지인의 사위)
(삼성 밀라노 지점에서 근무했었음)

월급 대다수를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 **연금보험료율 (근로자 33%, 자영자 24%)**

이탈리아의 미래가 없는 것 같다.
- **희망있어 보이는 나라로 떠났다.**
(국제 경쟁력있는 젊은이들이 조국을 등진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 피라미드가 매우 좋지 않은 편

스웨덴의 연금 관련 주요 지표 (RR, Replacement rate at retirement, 2019-2070)

		2019	2030	2050	2060	2070
실효퇴직연령		64.4				
연금가입기간		41.3	40.8	39.7	40.0	41.2
연금 소득대체율 (RR)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4%	35%	33%	31%	30%
	총소득대체율 (직역연금과 사적연금 포함)	42%	43%	38%	37%	36%
연금제도 부양비		51.4	55.2	62.4	69.6	72.9
노인 부양비		35.2	38.4	43.0	48.4	49.8
평균 연간 연금급여승률		0.92	0.90	0.84	0.82	0.80
보험료 (민간부문 근로자, 공무원, 자영자)		18.5%	18.5%	18.5%	18.5%	18.5%

출처 : Eurostat (2020) and Commission Services.
스웨덴 정부가 EU에 제출한 연금 장기 전망 자료에서 재인용

3. 연금 개혁 동향 : EU 회원국과 일본 중심으로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MCGPI), 2021

TOP 10 Pension Systems • Global Pension Index 2021

Ranking			Adequacy Ranking	Sustainability Ranking	Integrity Ranking
	1 Iceland	(84.2)	1	1	7
	2 Netherlands	(83.5)	2	3	3
	3 Denmark	(82.0)	4	2	13
	4 Israel	(77.1)	10	4	9
	5 Norway	(75.2)	3	16	2
	6 Australia	(75.0)	18	5	6
	7 Finland	(73.3)	13	12	1
	8 Sweden	(72.9)	17	6	16
	9 United Kingdom	(71.6)	9	14	8
	10 Singapore	(70.7)	11	13	12

The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MCGPI), 2021

Pension system (and overall index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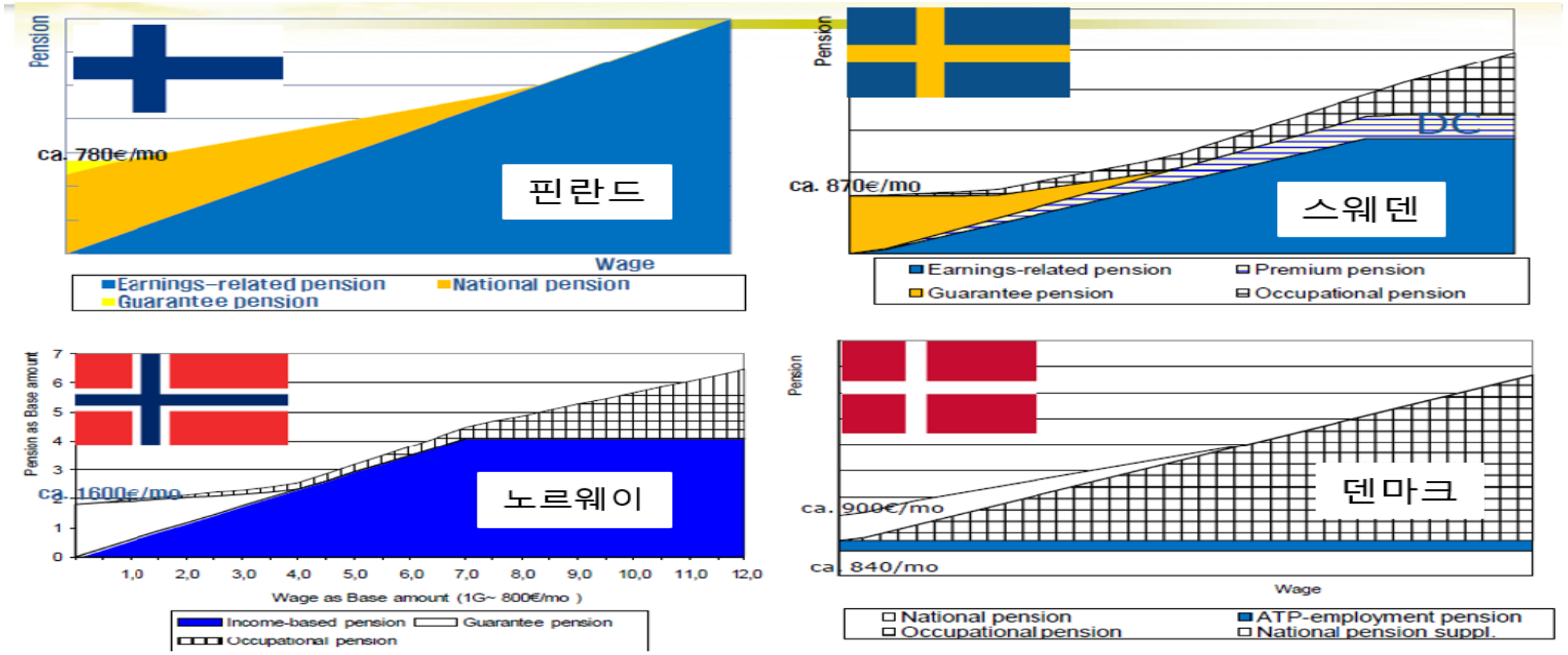
Australia (75.0),
Canada (69.8),
Denmark (82.0),
Finland (73.3),
France (60.5),
Germany (67.9),
Italy (53.4),
Japan (49.8),
Korea (48.3),
Netherlands (83.5),
Norway (75.2),
Singapore (70.7),
United Kingdom (71.6),
United States of America (61.4).

노르딕 4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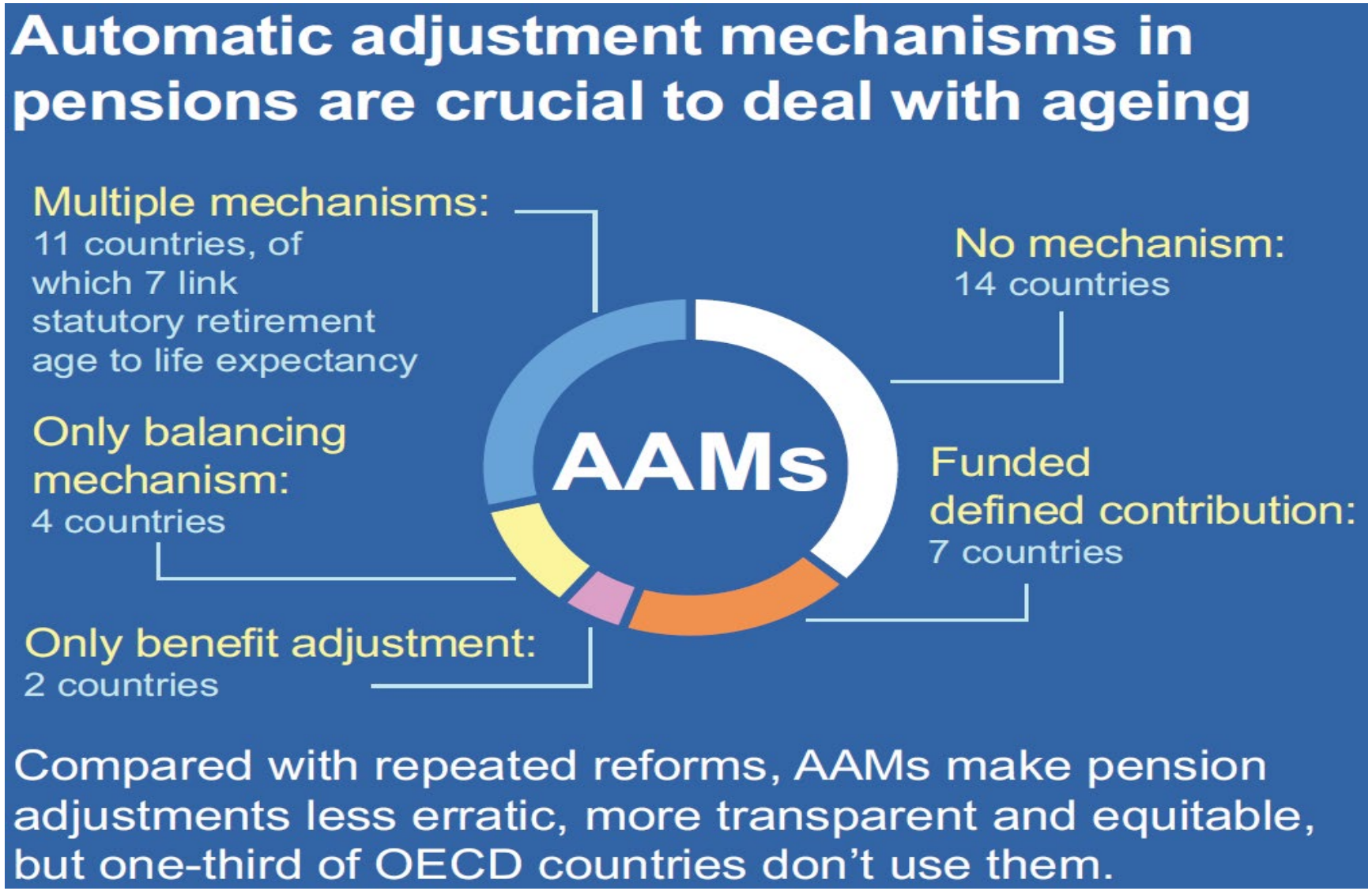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구조가 양호하고, **연금 보험료를 두 배 가까이 더 부담하고 있음**에도,

덴마크를 제외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보편적인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폐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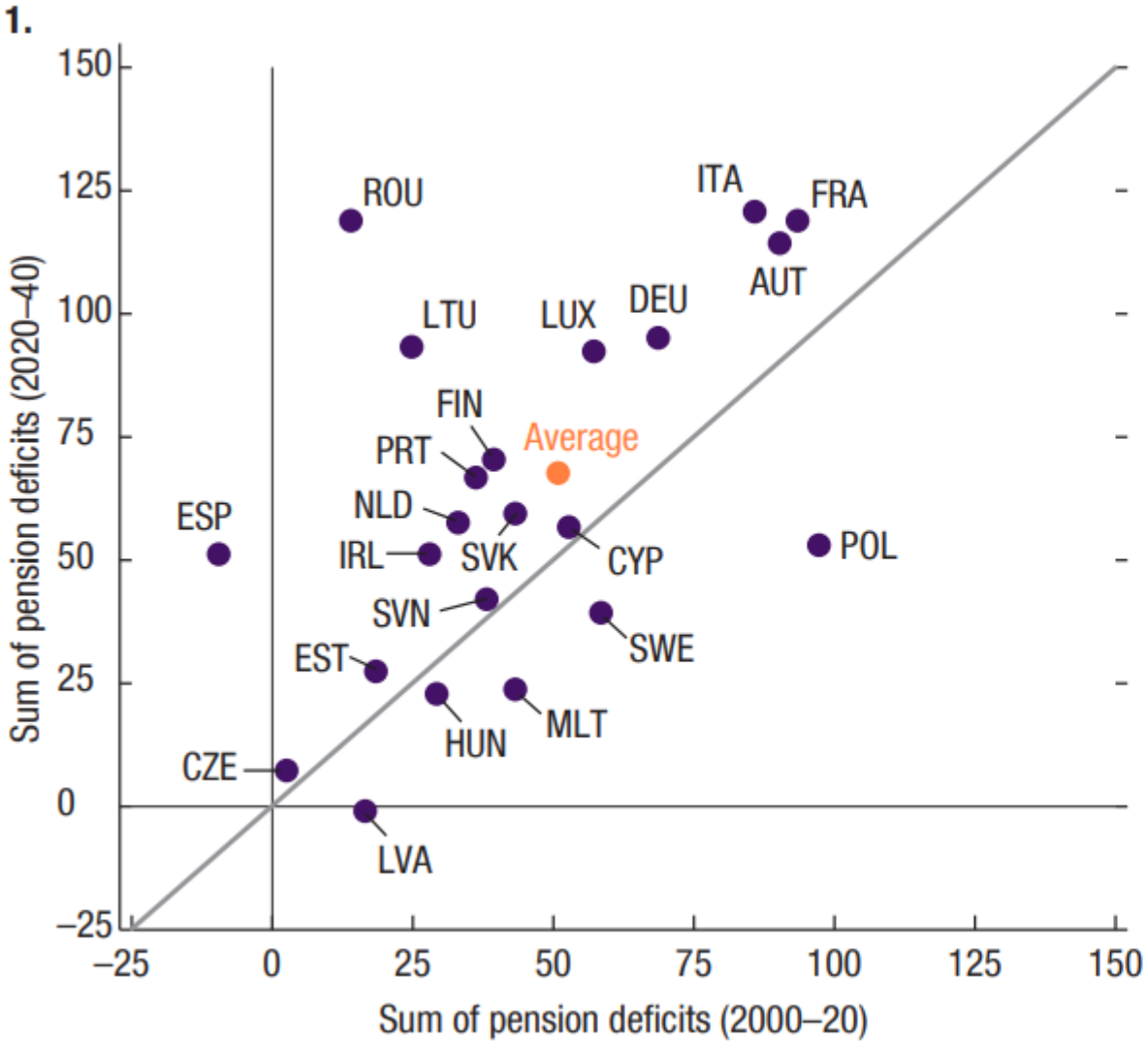
-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은, 연금제도 발전 경로와 후세대 부담 증가로,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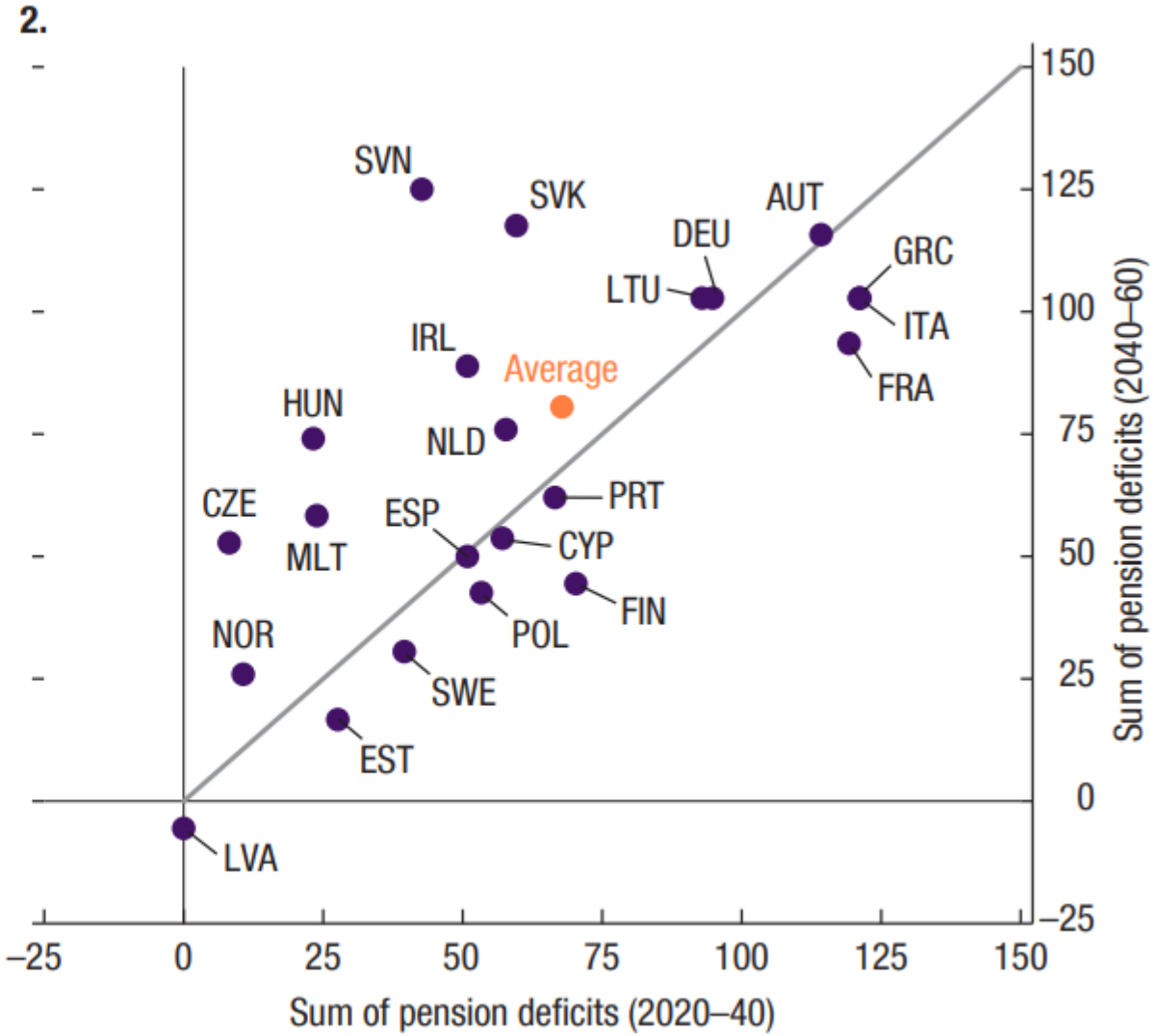


OECD 회원국 2/3가 이미 자동안정장치 도입



EU 회원국, Cumulative Deficits of the Public Pension Systems (Percent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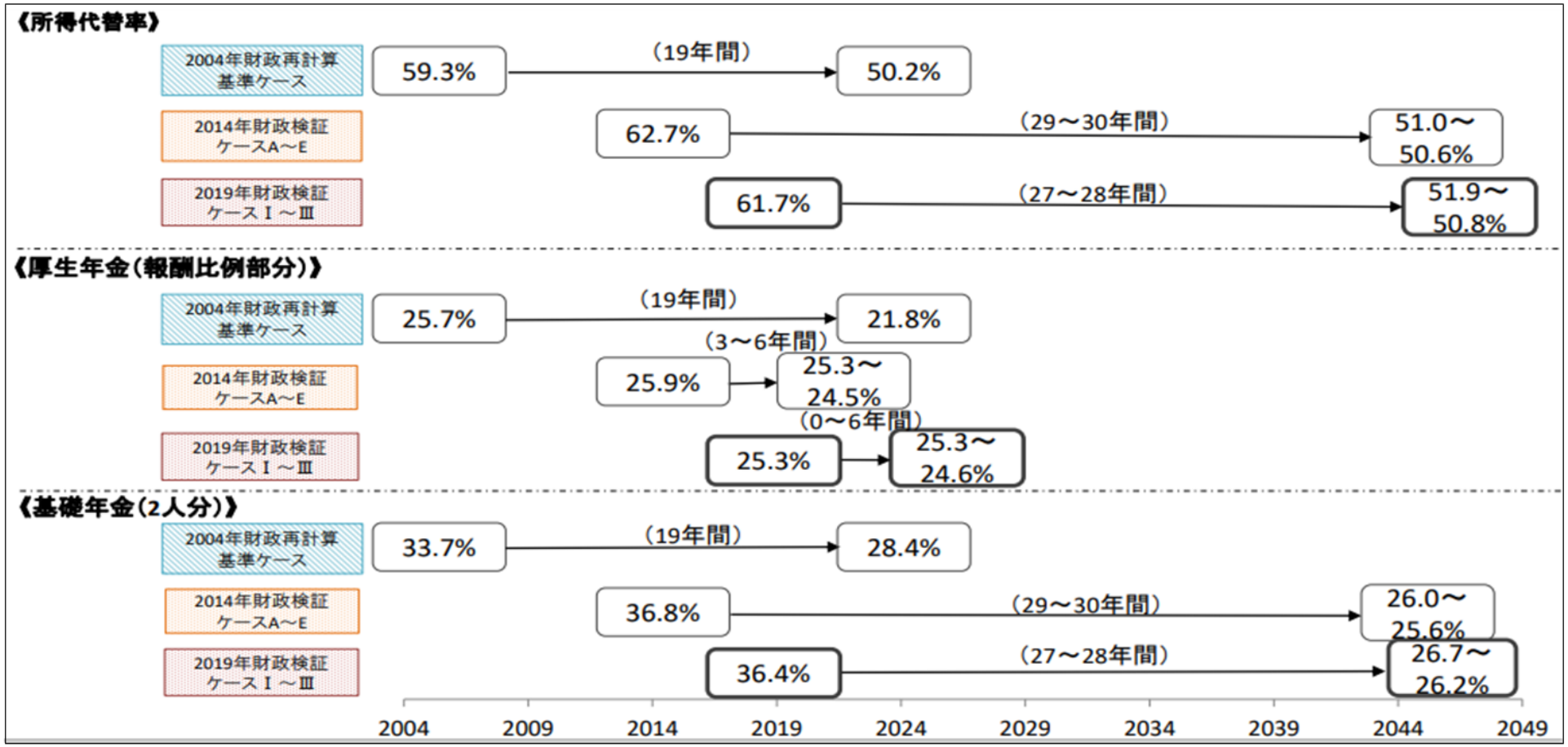




출처: IMF staff calculations (Pension Reforms in Europe, 2021).

일본의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작동 내용

(2004년 개혁 이후 2014, 2019년의 재정재계산에 근거함)



자료: 2021년 한국 연금학회 주관 국제 세미나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연금국의 Hironobu Ueda 관리관이 발표한 자료**에서 인용하였음.

적게 부담하는 한국이 어떻게 일본보다 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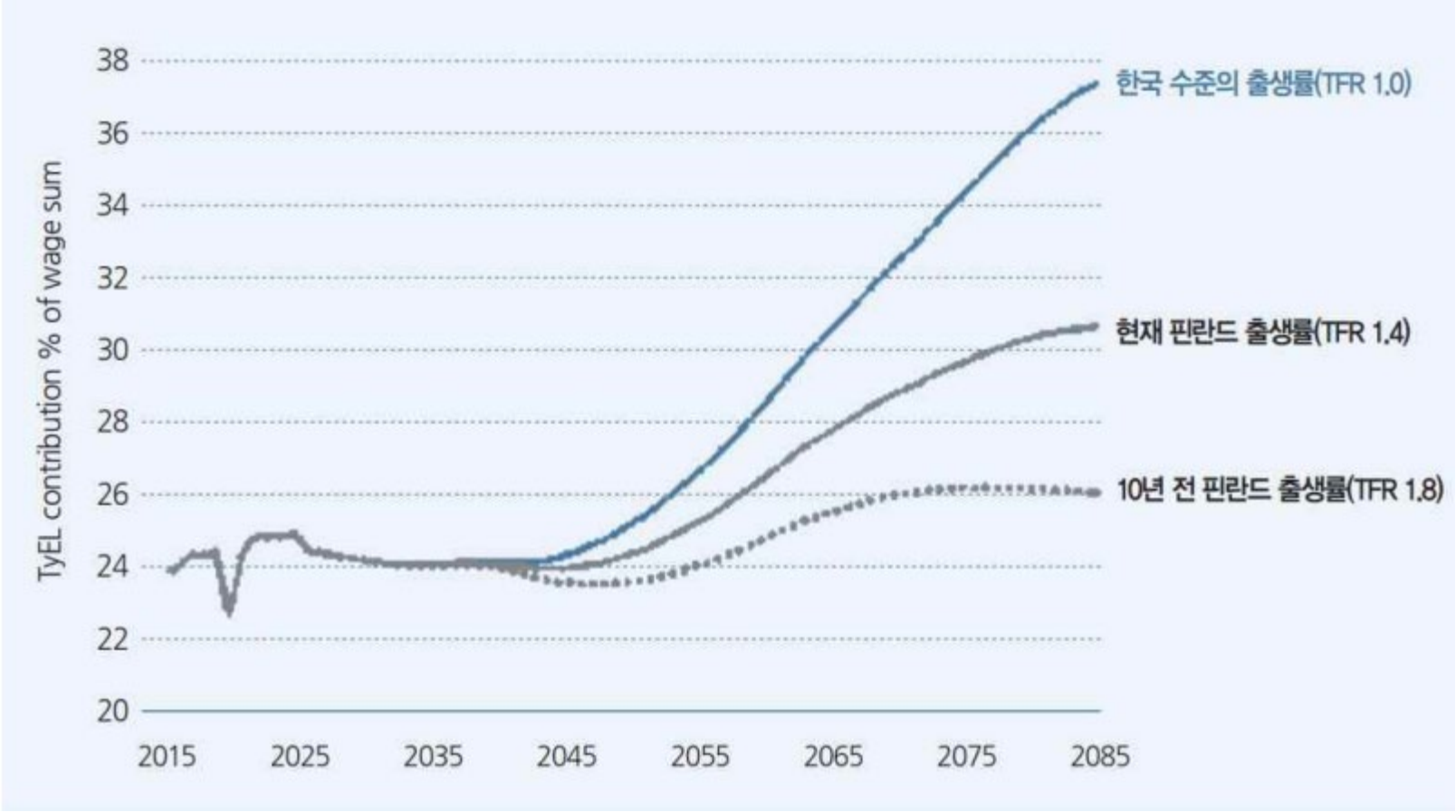
- In a seminar among Korea, Chinese and Japanese experts,
  - **A Japanese official** also wondered,
  - How **could Korea pay more in pensions than Japan** when Koreans **pay much less premiums** (9%) **than the Japanese** (18.3%)?" (Cite from **Risky pension politics**, **Korea JoongAng Daily** Column by **Yun Suk-myung**. Nov. 3, 2021)

日本の年金制度の特徴（3） 最近の動向

- 最近の改正
  - 2004年改正
    - (1) 保険料固定方式の導入
      - 従来は給付水準を決定し、それに見合う保険料(率)を設定。
      - 2004年以降、国民年金は毎年280円、厚生年金は毎年0.354%引き上げ、国民年金は2017年4月に16,900円(2004年度価格)、厚生年金は2017年9月に18.3%で固定。
    - (2) マクロ経済スライドの導入
      - 保険料を固定したことで、収入を増加させる方法の1つが失われた。
      - その中で、給付と負担のバランスを確保することが必要。
      - 物価や賃金の上昇に連動した給付水準の上昇について、経済社会の状況をもとに一部抑制する方法。
    - (3) 有限均衡方式の導入
      - 約5年分の給付をまかなうだけの額があった年金積立金を、約100年間かけて、約1年分の給付をまかなう水準まで取り崩す。
      - ただし、5年に1回行われる財政検証のたびにその後約100年で計算するため、実際に今から100年後に約1年分の給付しか残ら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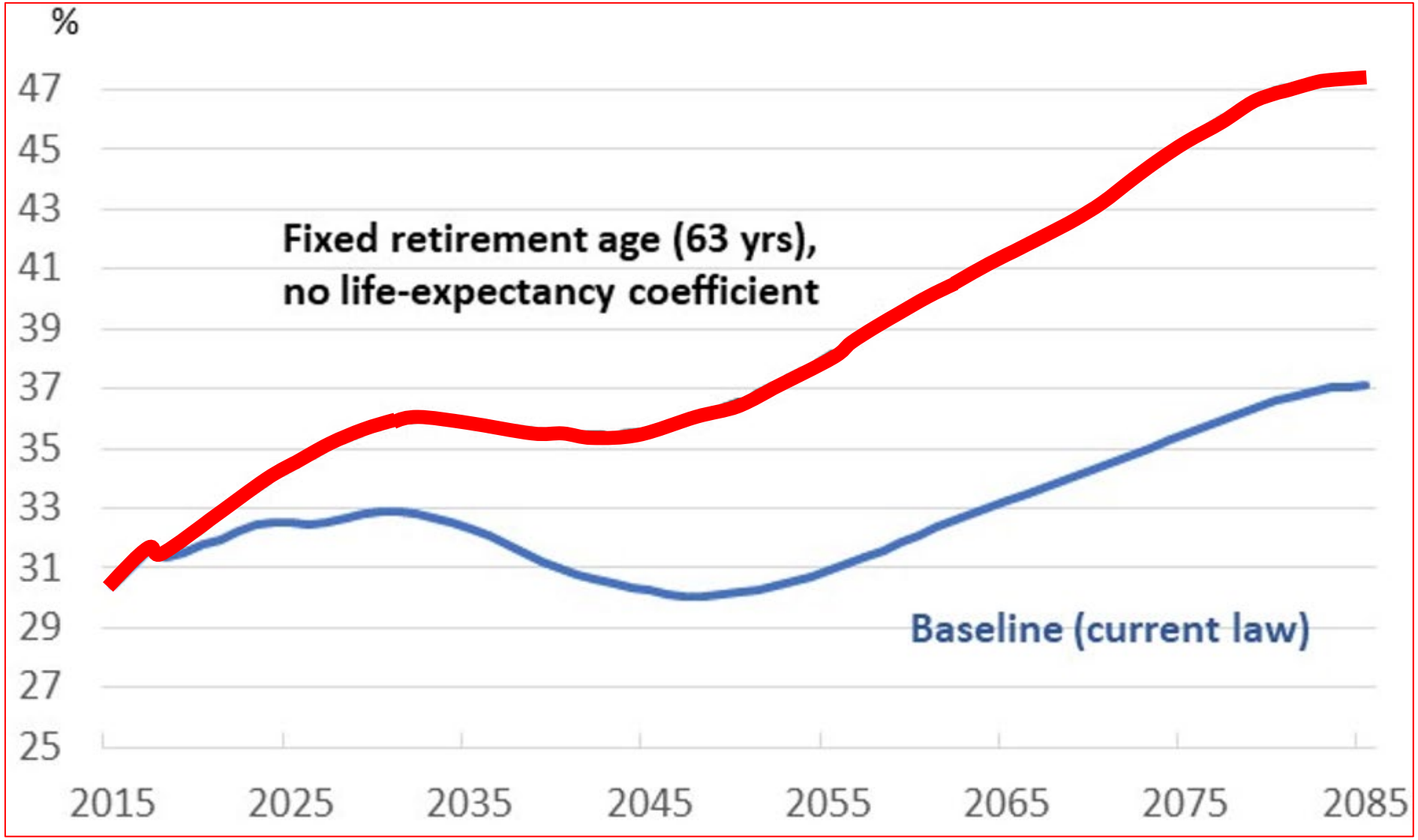
※ 財政検証では、パラメータによっては積立金が枯渇するケースも想定。

출산율 변화가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에 미치는 영향 비교



주: **핀란드 연금제도에 한국 출생률(TFR 1로 가정)과 핀란드의 현재와 과거(10년 전) 출생률을 적용할 경우의 예상 보험료**임.
원자료: Mikko Kautto, "Future Reform Directions in the Pension System in Finla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ensions of South Korea and Finland: Demographic Challenges and Future Response, October 7, 2021. Mikko Kautto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발표자가 한글로 수정한 그림임**.
자료: 윤석명,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 『예산춘추』, 국회 예산정책처, 2022.

(자동안정장치 관련) 핀란드 보험료 추이 (Ismo Risku,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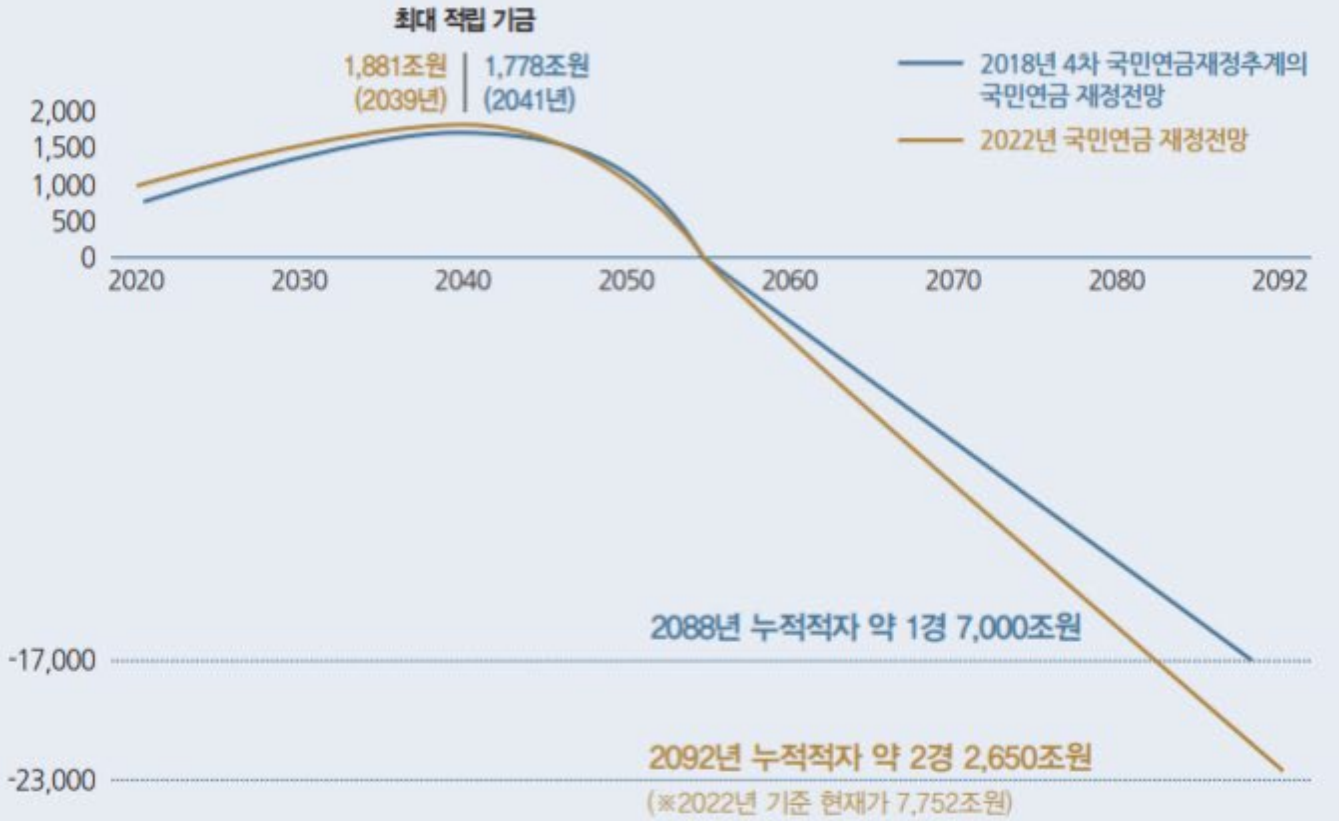


4. 우리 연금이 처한 현실과 연금 정책 목표들

***Budget and Policy*,**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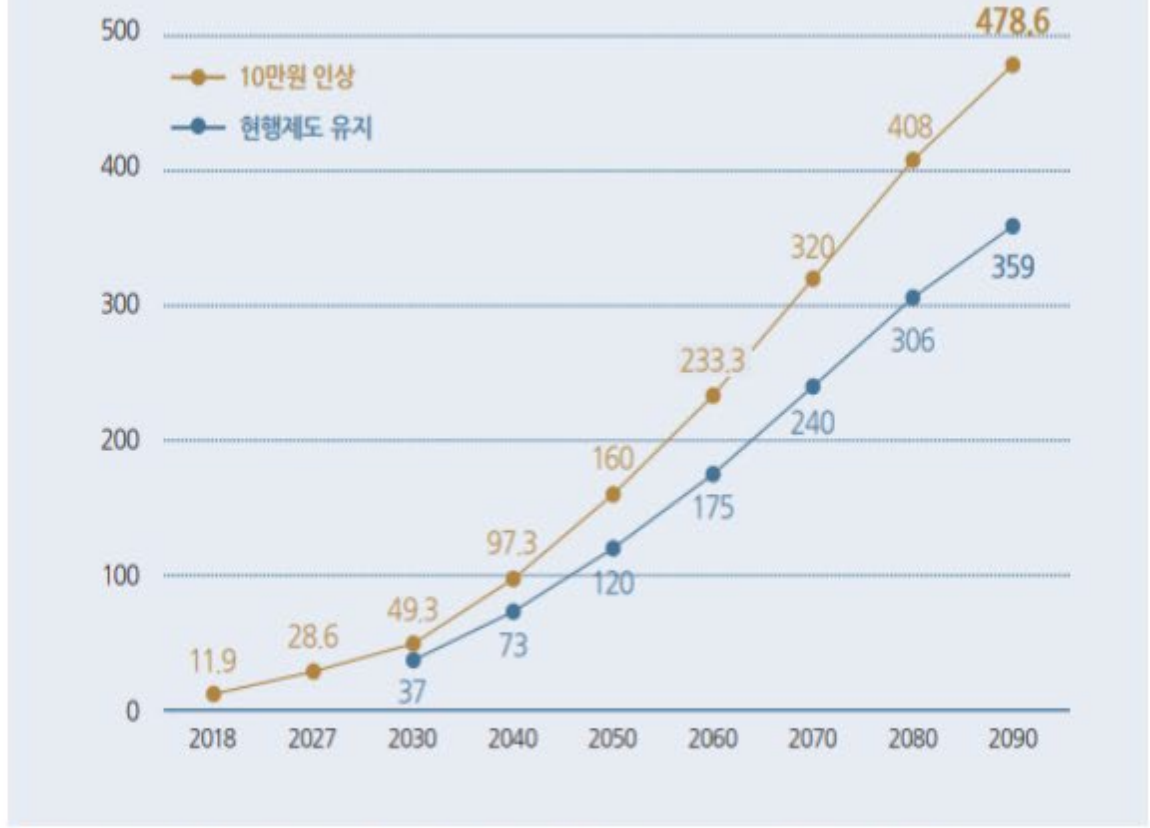
국민연금 누적적자와 기초연금 지출 장기 전망

그림 2 국민연금 누적적자 규모 비교 (2018년과 2022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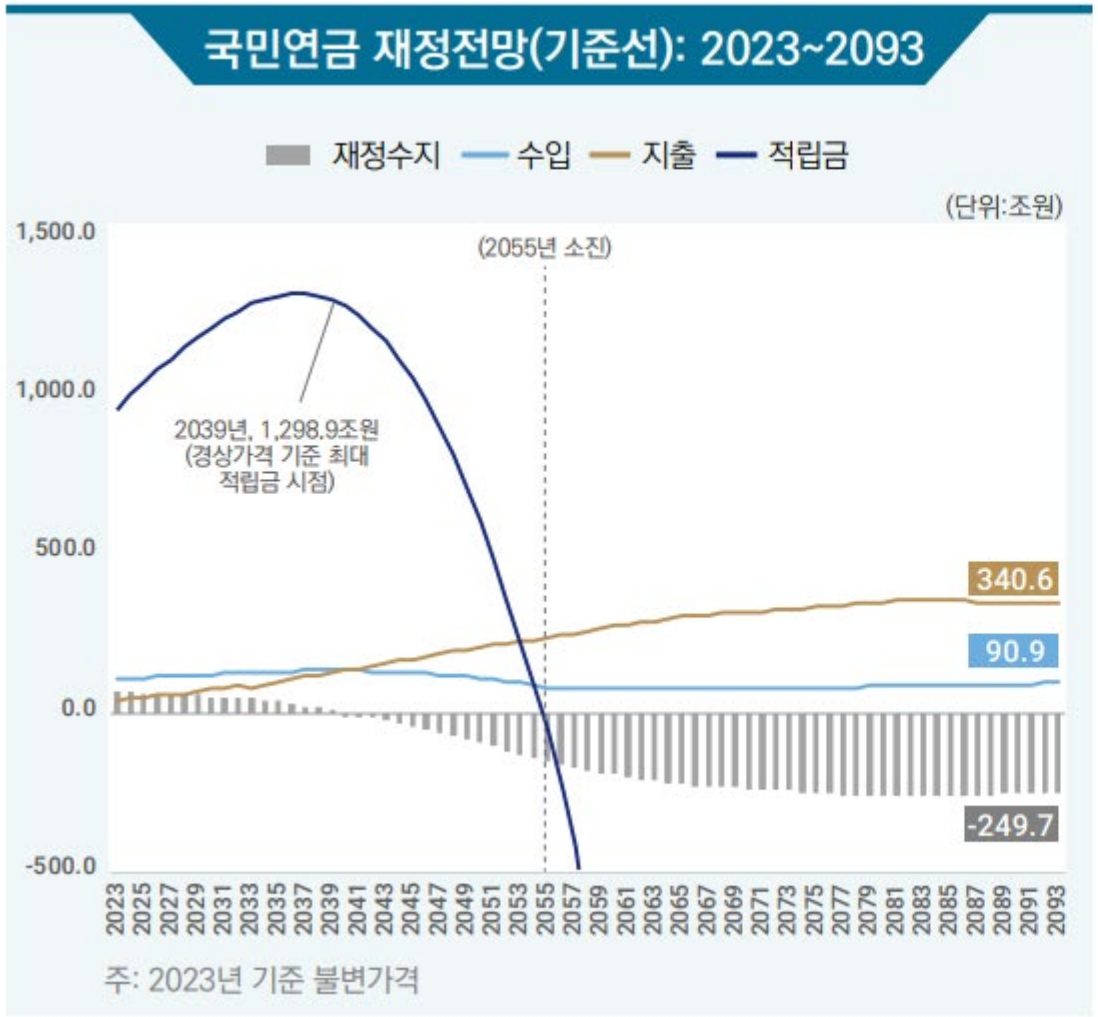
주 2088년까지 누적적자는 행정부의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결과를 반영하였음. 2092년까지의 누적적자는 2022년 필자 연구책임 과제 추계 결과이며. 최대 적립 기금은 1,881조원(2039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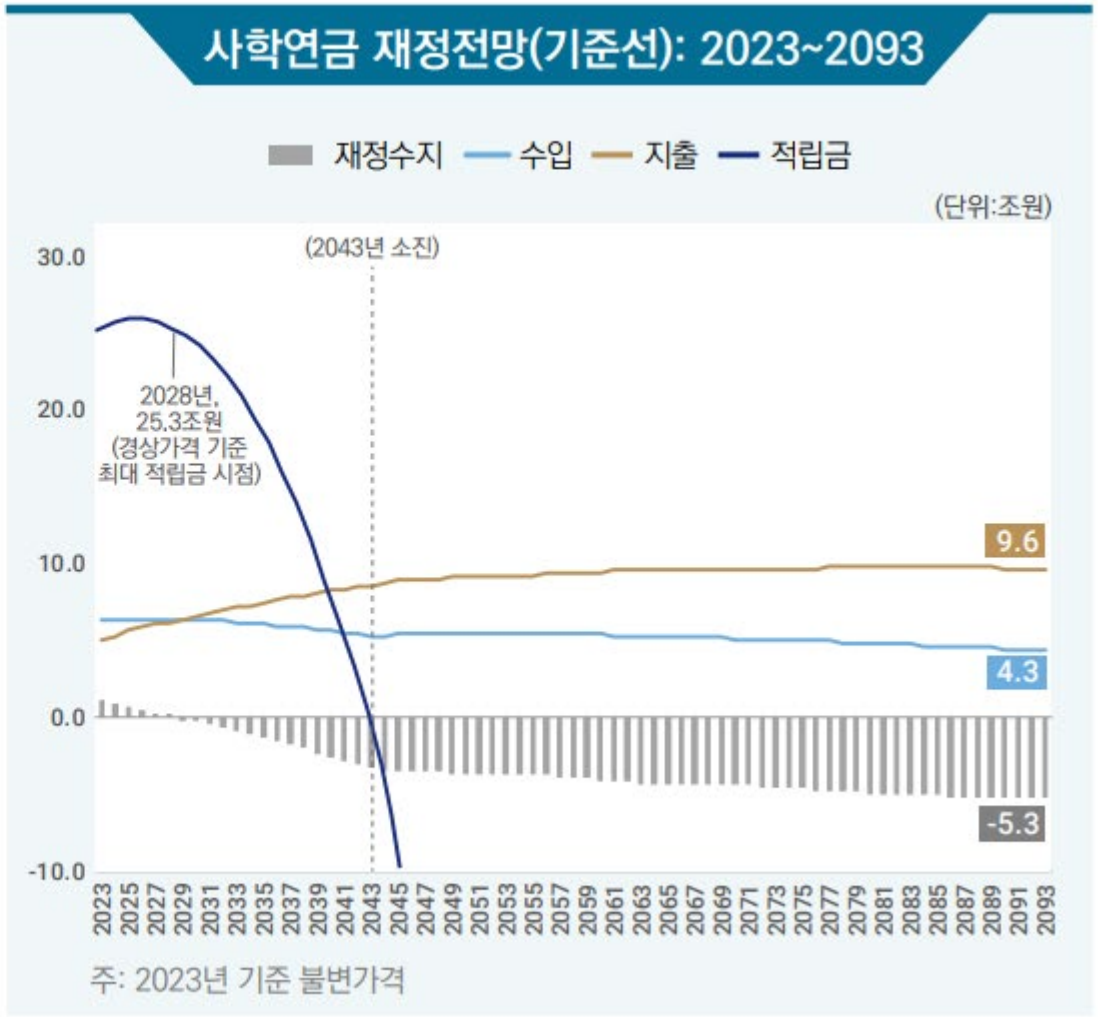
그림 3 기초연금 재정추계 전망 (2018~2090년) (단위: 조원)



주 기초연금을 현행대로 월 30만원 지급할 경우와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의 2090년까지 재정추계 결과임
2018년과 2027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2030년부터 2090년까지의 재정추계는 필자 연구책임 과제의 추계결과(2022년 재정추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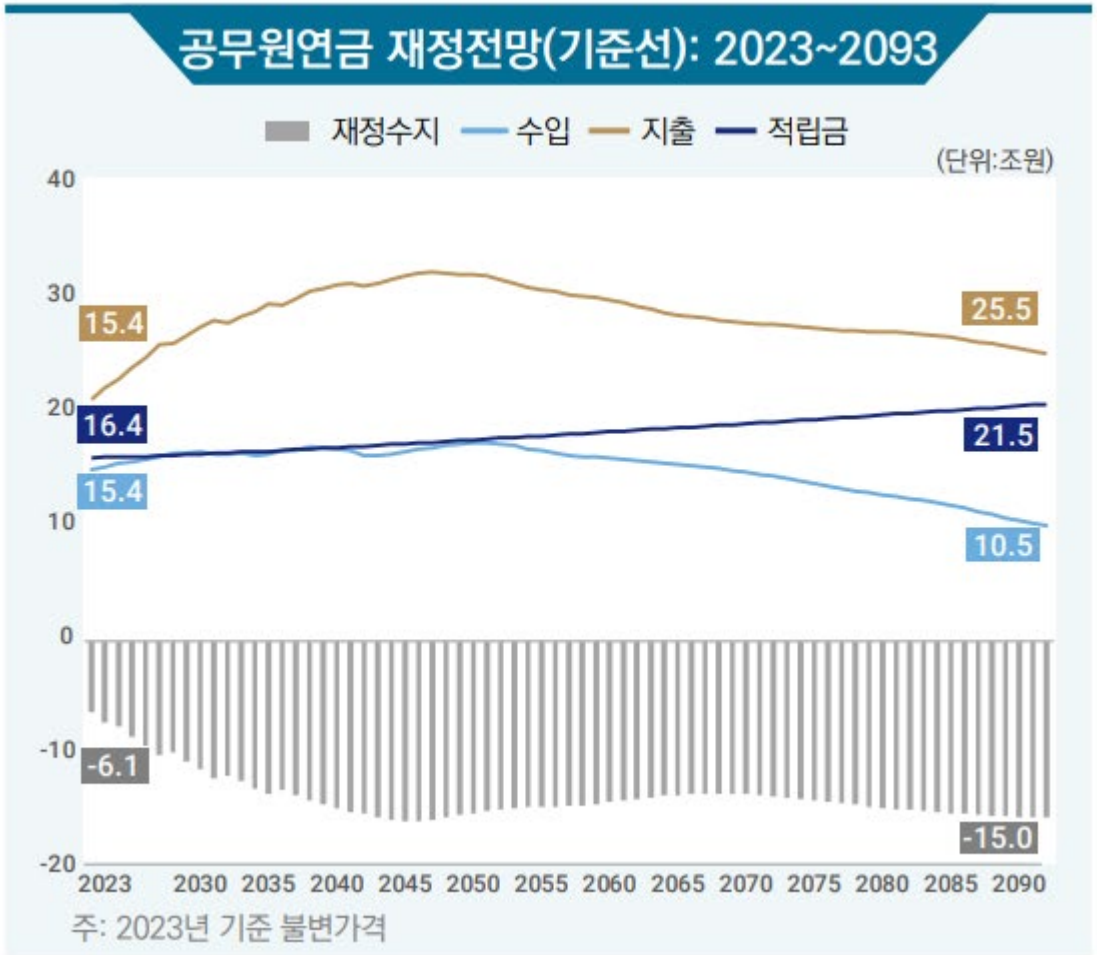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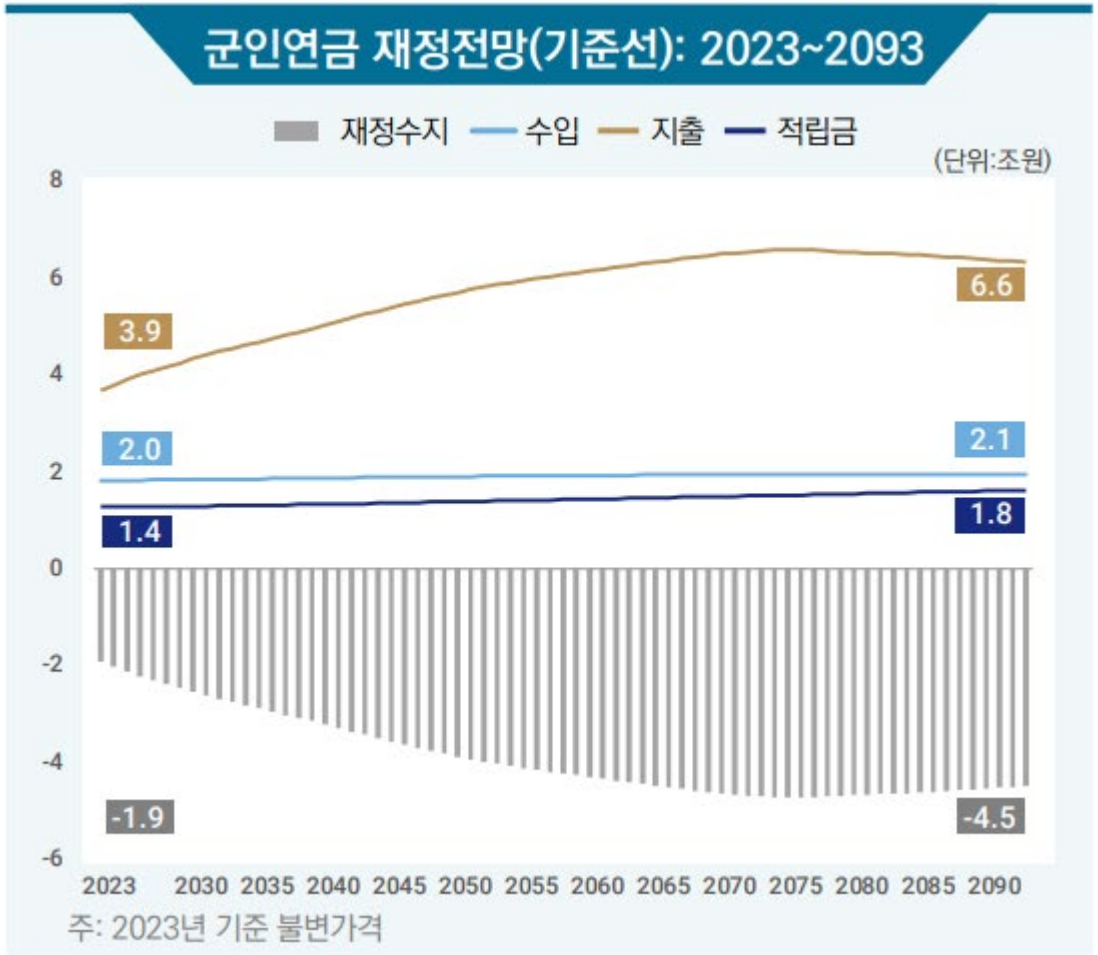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3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전망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3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보험료율	15%	15%	15%	12%	12%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40%)	45%	50%	현행 유지(40%)	현행 유지(40%)
수급개시 연령	현행 유지(65세)	현행 유지(65세)	현행 유지(65세)	67세	현행 유지(65세)
급여결정 방식	재분배	재분배	재분배	재분배	소득비례

주: 1. 시나리오①, ②, ③의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 인상 가정
2. 시나리오④, ⑤의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1%p 인상 가정
3. 시나리오②, ③의 소득대체율은 2025년 즉시 인상 가정
4. 시나리오④의 수급개시연령은 2038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 가정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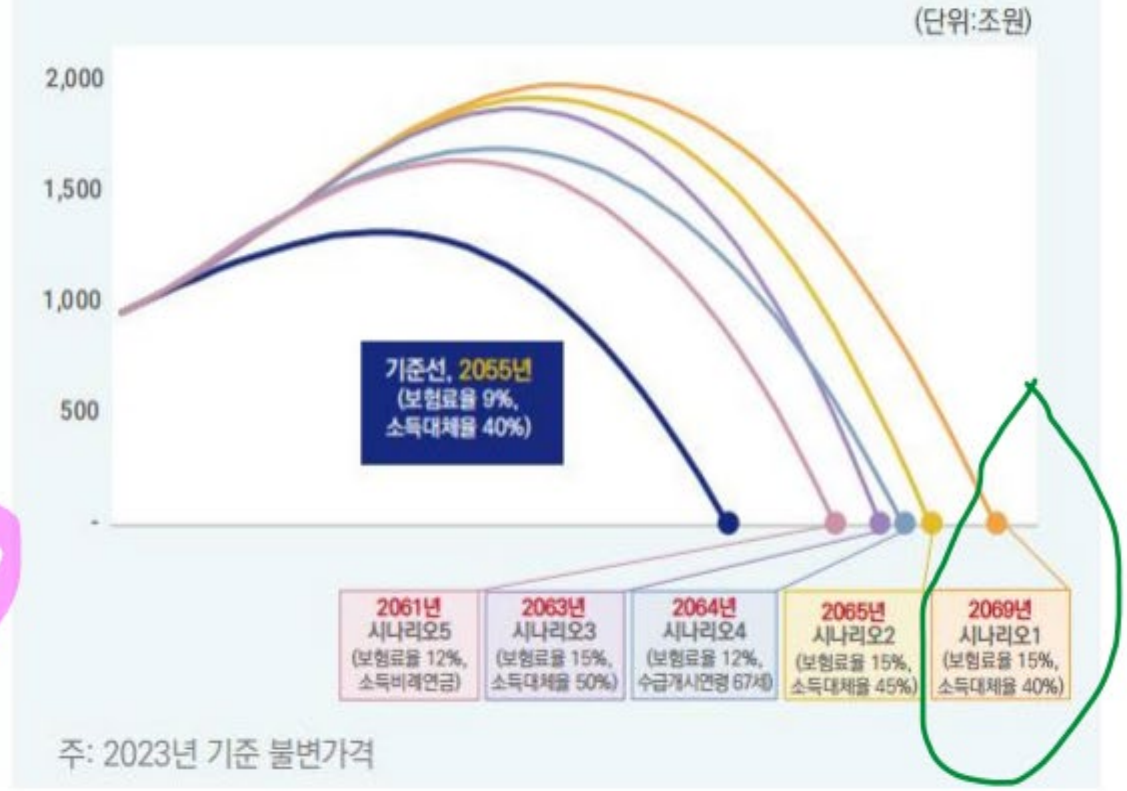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누적적자 감소 추이가 재정안정화 방안 평가의 핵심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기준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적자전화	2040년	2052년 (+12년)	2049년 (+9년)	2048년 (+8년)	2047년 (+7년)	2045년 (+5년)
기금소진	2055년	2069년 (+14년)	2065년 (+10년)	2063년 (+8년)	2064년 (+9년)	2061년 (+6년)
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분	-	△3,699 조원	△1,976 조원	△283 조원	△2,966 조원	△1,080 조원

주: 2023년 기준 불변가격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적립금 전망 결과



주: 2023년 기준 불변가격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3

현행 및 시나리오(2025년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보험료는 3년 동안 12%로 인상) 하에서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

구 분	적립금 최대연도	적립금 최대금액	재정수지 적자 전환 연도	적립금 소진연도	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액
현 행	2039년	경상: 1,704.3조원 불변(2023년 기준): 1,298.9조원	2040년	2055년	-
시나리오	2043년	경상: 2,217.5조원 불변(2023년 기준): 1,586.0조원	2044년 (+4년)	2058년 (+3년)	1,404.4조원

주: 1. 전망액은 2023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
2. 적립금의 경우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최대 적립금 도달 및 적립금 소진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점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제시

자료: 안철수 국회의원실 제공(2023. 4.). 국회예산정책처.

(2021 회계연도 기준) 공무원연금충당부채(904.5조원)와 사학연금의 미적립 부채(170조원)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2021년 12월 31일 기준) : 904조 5,497억원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 357조 7,516억원.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 546조 7,981억원)
2021년 1년간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 74조 7,602억원.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당기근무원가인 29.6조원임.
[이를 공무원 재직자 126만명으로 나눈,
1인당 약 2,350만원인 충당부채(2021년 한 해 기준)의 절반 이상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떠 넘겨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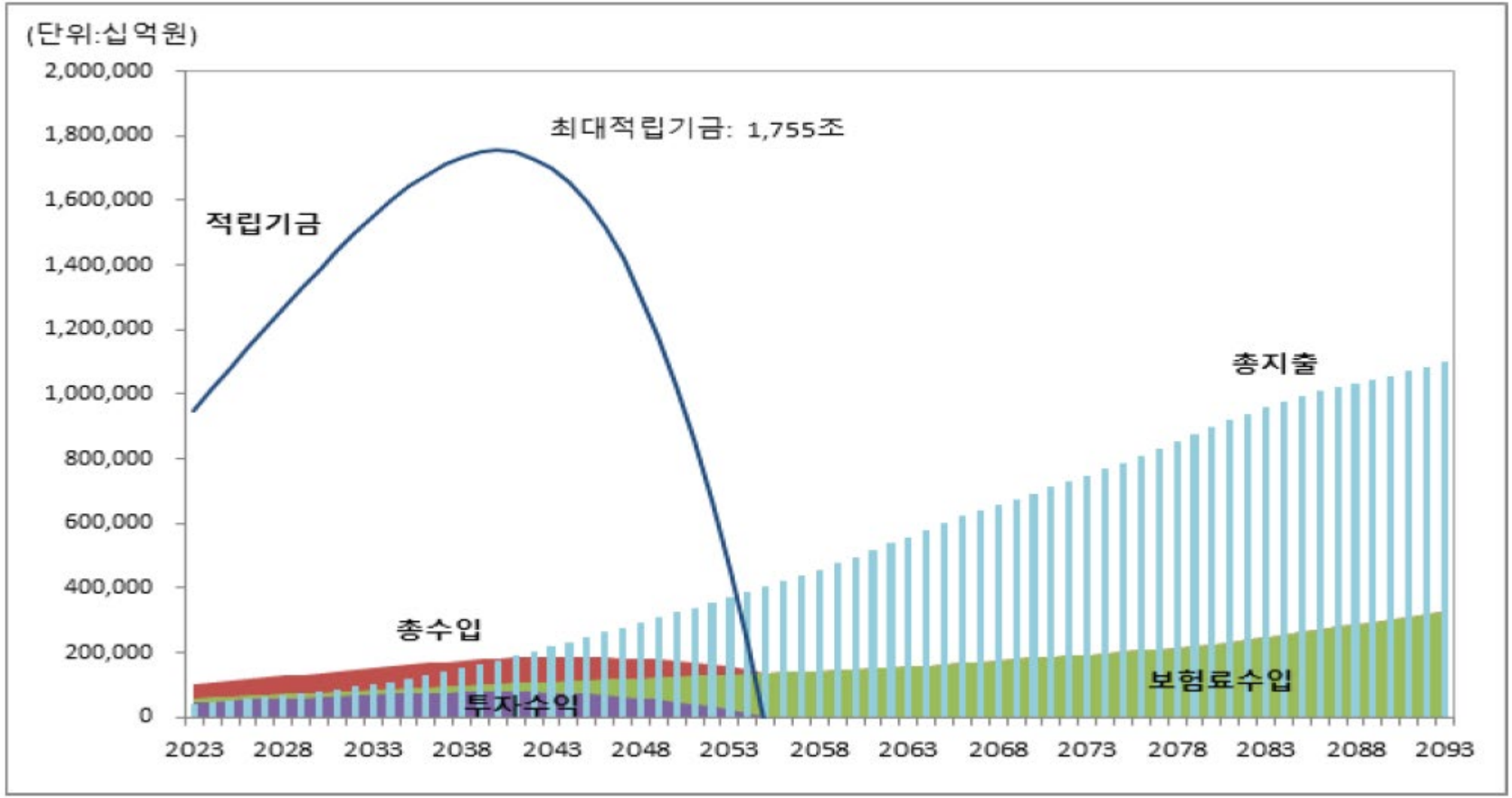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공단,
2021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

2021 회계연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170조원)
사학연금 33만 가입자 1인당 약 5억원의 부채가 있음을 의미

5.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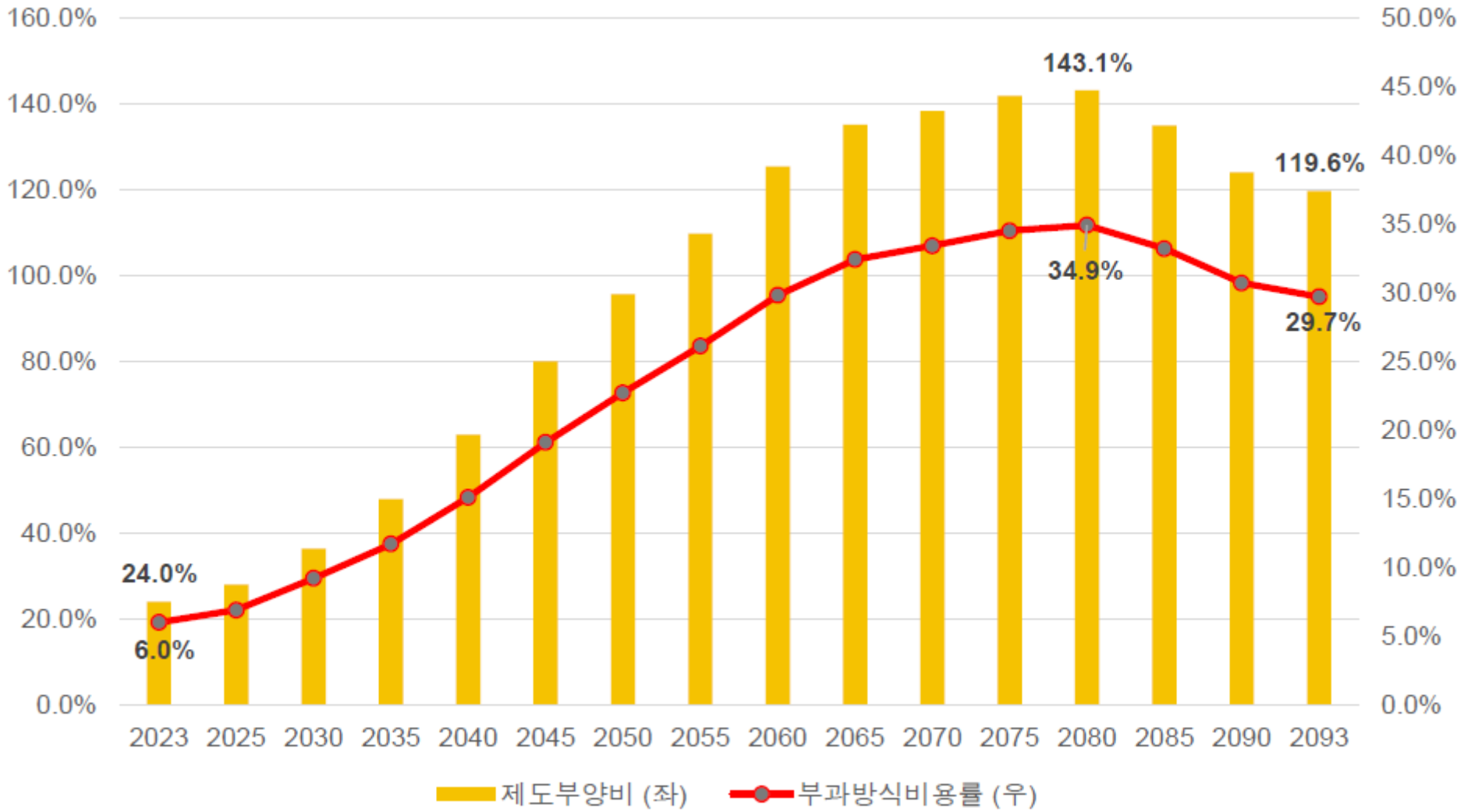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국민연금 재정전망: 2055년 기금 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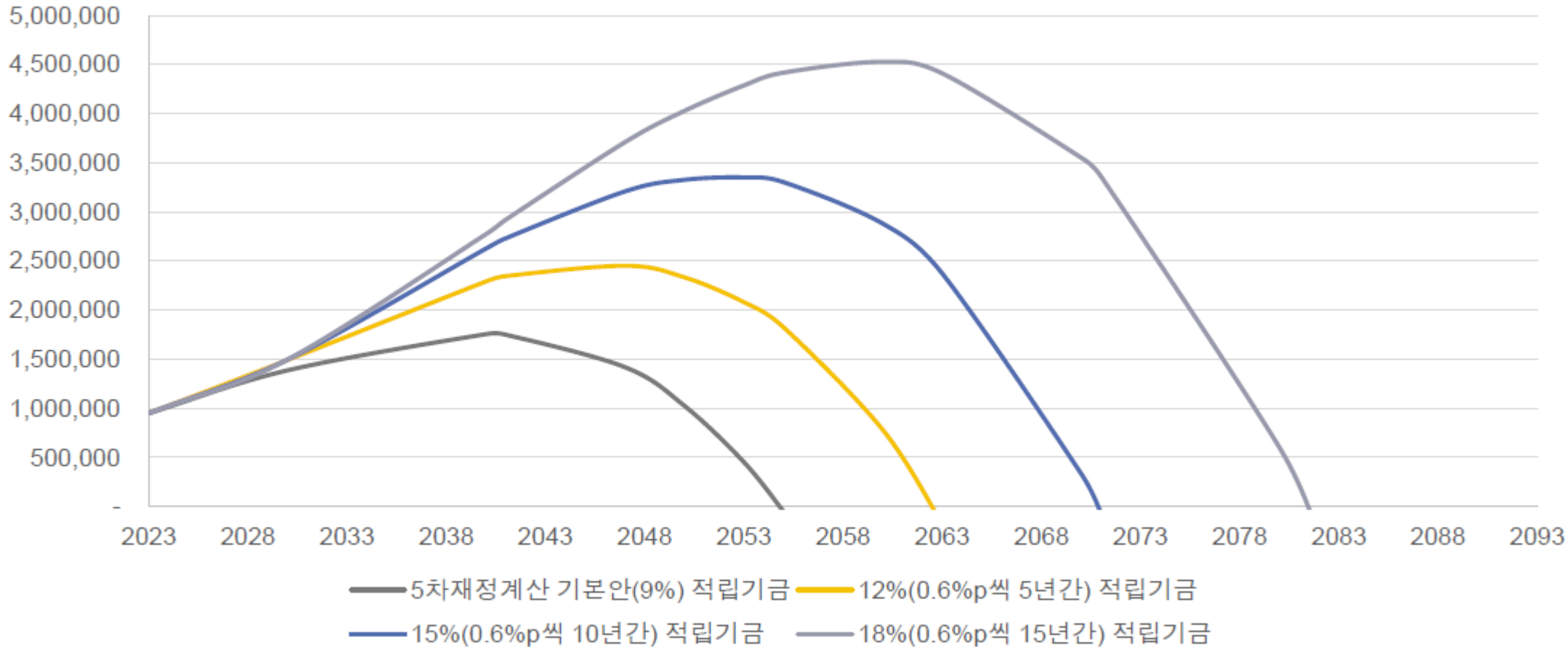
국민연금 재정전망 추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8년 35.0%**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30% 수준유지
✓연금제도 부양비는 2023년 24%에서 **2078년 143.8%**, **2093년 119.6%**로 증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조합별 재정전망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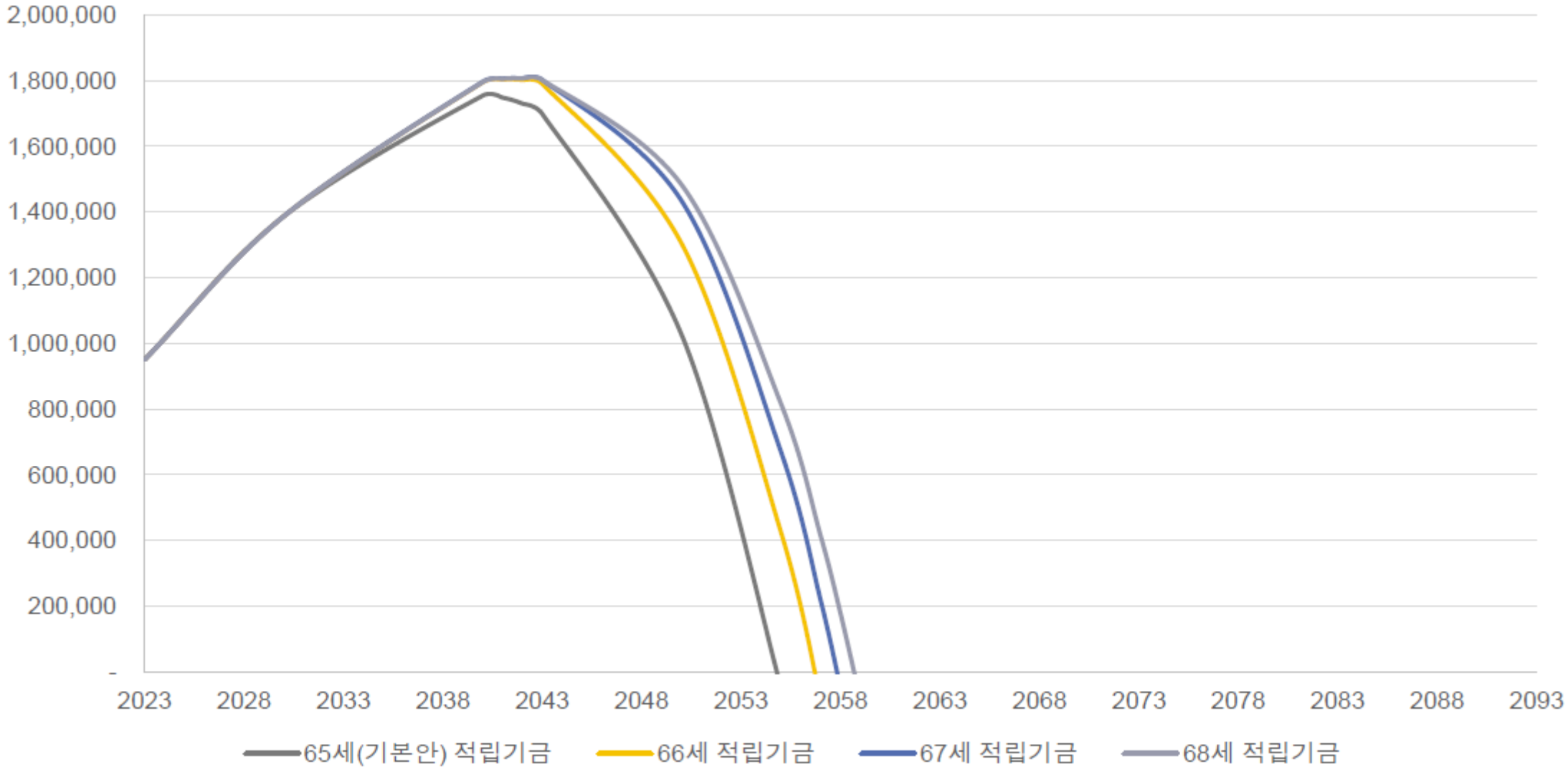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조정 대안별 재정전망

- ✓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7년(남녀 통합)이었던 기대수명은 2020년 현재 83.5년이며, 2070년에는 91.2년까지 증가할 전망
- ✓ **추가적 재정안정화 조치로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쥴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 제안**
- ✓ 다만, 지급개시연령의 연장은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고령자 고용정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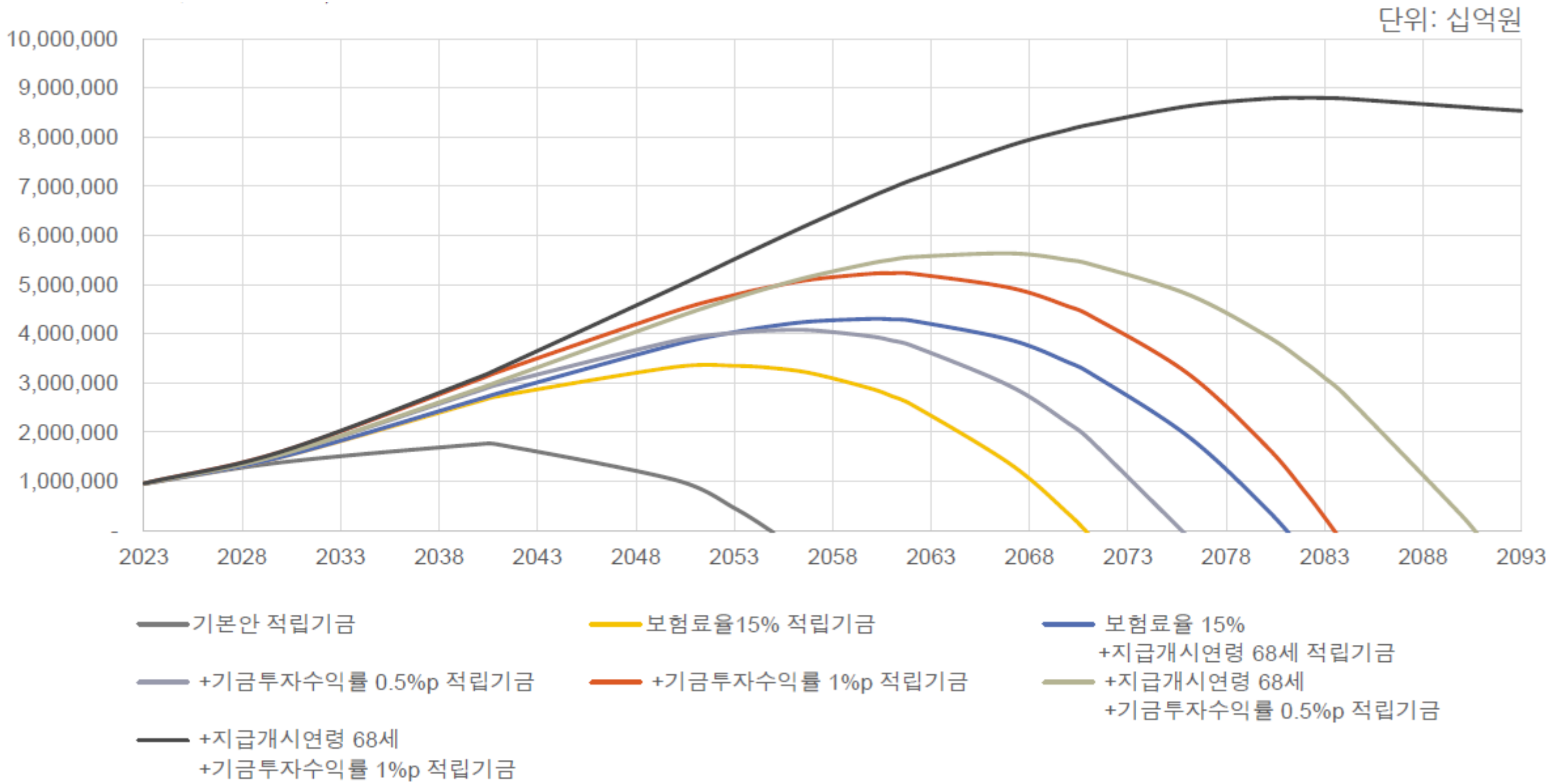
지급개시연령 조정	수지적자 연도	기금소진 연도	부과방식비용률
현행	2041	2055	29.7%('93년)
66세	2042	2057	28.5%('93년)
67세	2043	2058	28.0%('93년)
68세	2043	2059	27.5%('93년)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조정 대안별 재정전망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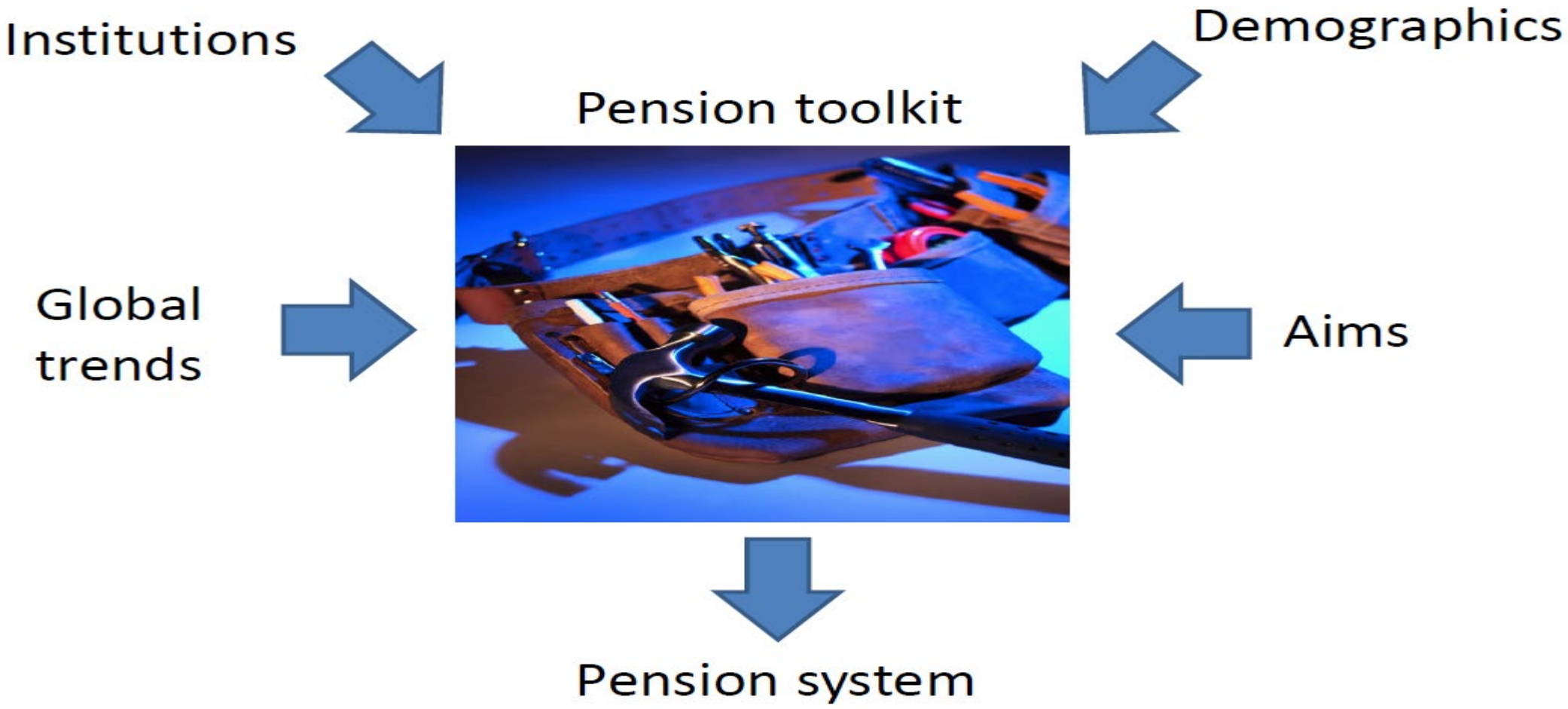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 정도



6.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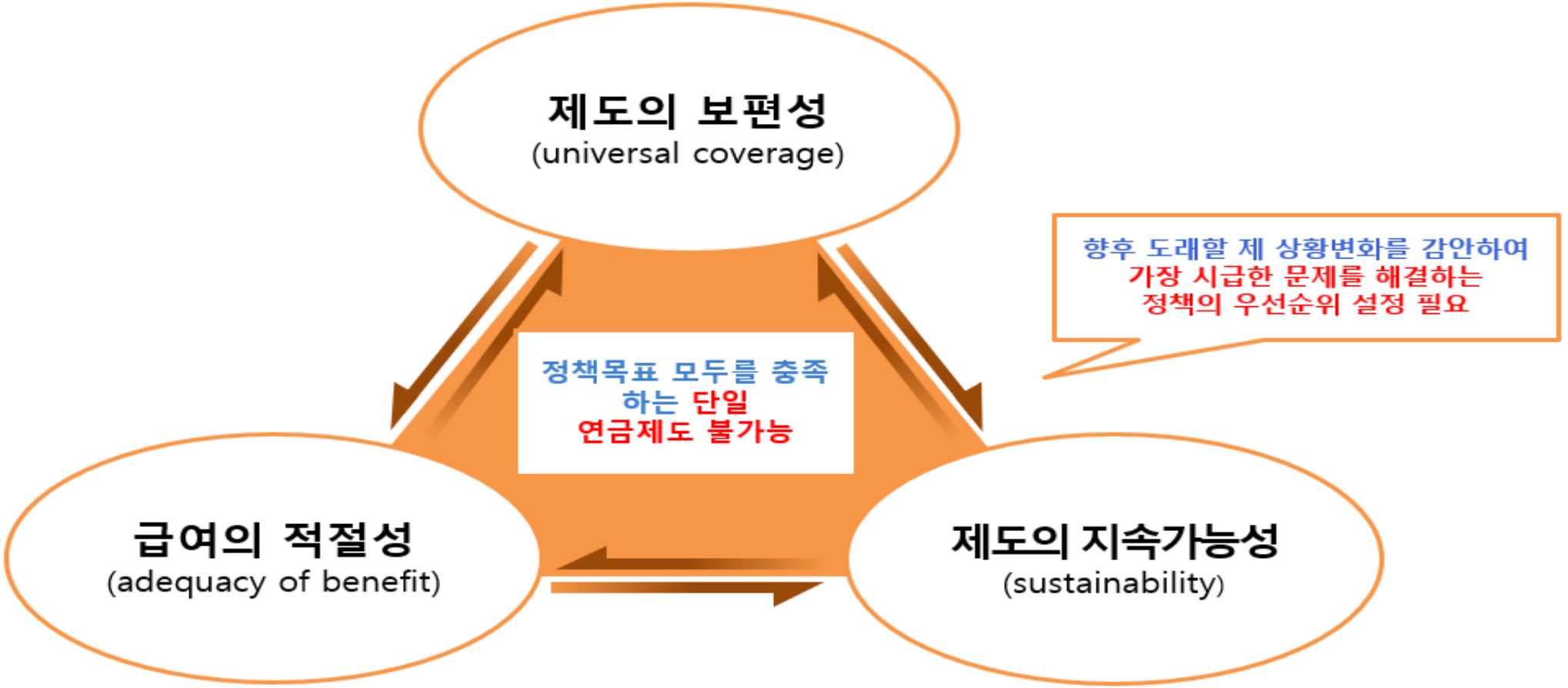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또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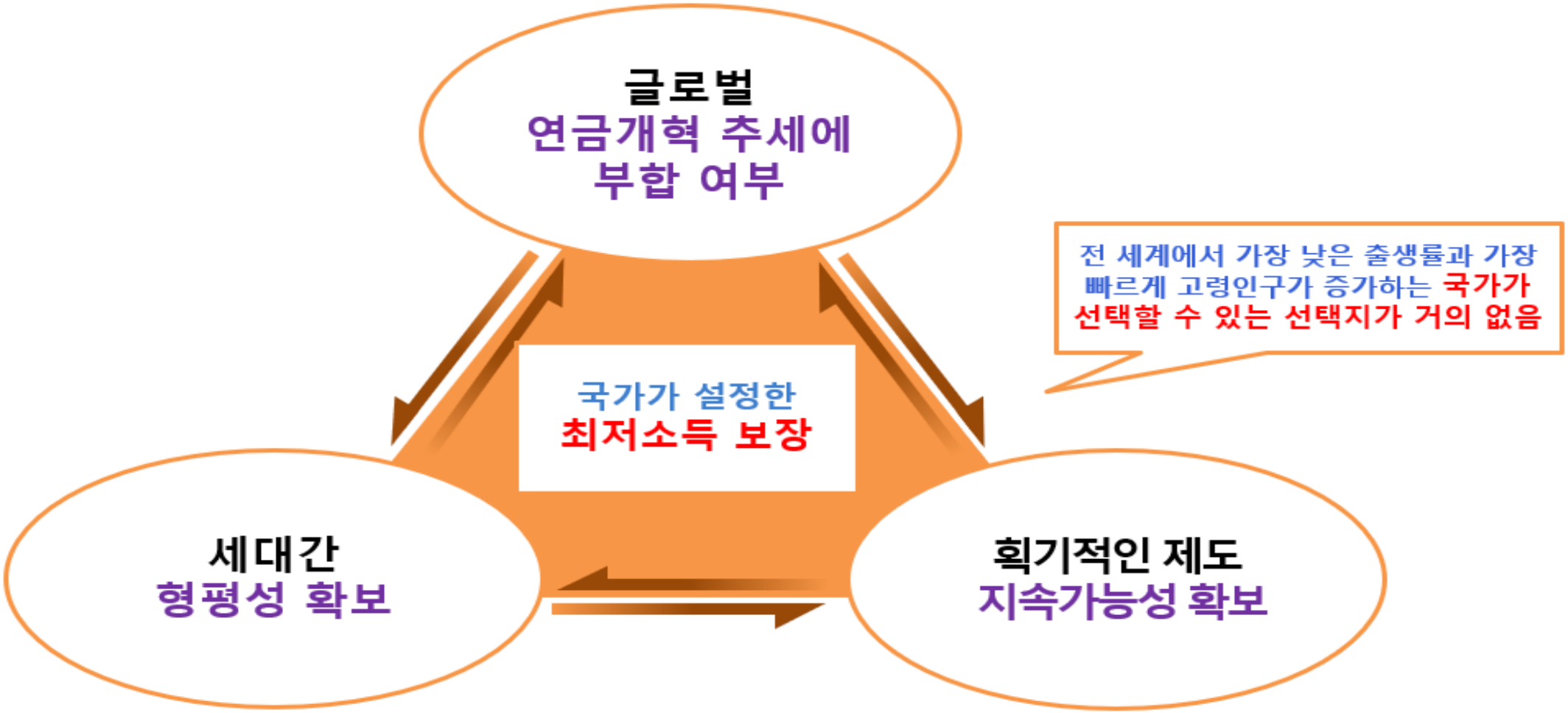
연금정책목표의 우선순위 설정문제

하나의 연금제도로 연금정책 모두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 불가능 :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금정책 목표들의 최대 공약수 찾는 방향으로 접근 필요**



연금개혁 원칙을 설정하여 개혁대안 평가할 필요성 대두



'하우스 어셈블리' 토론회 "국민연금, 신뢰 못 줘"...MZ세대 "이럴거면 폐지하자" 소신발언도

2023년 4월 6일 열린 **'하우스 어셈블리'**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협동조합하우스 제공]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구조적 딜레마 : 미래세대는 속삭이는(Whisper) 반면에, 현 세대는 크게 소리치고(Shout) 있다.(Al Gore)

출처: 서용석, "**세대간 형평성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발제 자료(2016. 11. 9.)

코틀리코프(2011) 교수 칼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세금도 빚이다 (중앙 선데이, 2011.08.07)

가상의 국가 '세금국(Taxdonia)'을 생각해 보자.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는 갈수록 커지는 세금 부담에 허덕인다. **걷은 세금은 바로 노인에게 지출된다.** 세입과 지출은 늘 같다. 세금국의 아이들은 납세 의무를 교육받는다. 부모들은 말한다. "우리도 젊어서 세금을 냈다. 우리가 어른 세대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세금은 나이 많은 이들이 정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젊어서 낸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고 더 높은 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책무를 느끼지 않는다.** 높은 세율을 거부했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대 갈등이 시작됐다. 노인들은 지출과 세금을 늘리고 싶어했고, 젊은이들은 줄이고 싶어했다. 각각은 상대를 적대시하고 서로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재정 전문가라는 자들이 노인에 대한 부담을 젊은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이 젊은 경제학자를 고용했다. 과거의 집단은 그들이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고, 젊은이들은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말려들었다는 게 밝혀졌다.** 정부는 미래의 혜택을 약속하면서 빚 대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셈이었다.

중앙은행은 젊은이들에게 약속했다.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노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은행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은행은 돈을 찍어 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의심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모아놓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세금을 내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 은행은 답했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다. 일을 하고 세금을 내라. 그럼 좋아질 것이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찾아 떠났다 (이탈리아의 마리오처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 방향 (1)

□ 2022년 **출생률(TFR) 0.78의 의미 (서울 지역 출생률 0.5)**

◦ **70만 – 100만명 세대를, 24만명 세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

- 그 어느 나라보다도 몇 배 더 강력한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함

□ **제대로 된 연금 현황 보고서 작성이 시급함** (막연한 낙관주의 근원)

◦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이해집단들의 바람과 현실 혼동이, 포퓰리즘의 근원이 되고 있음**

- 걱정도 팔자야?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중!)

- '네가 더 받는다. … 내가 더 불리하다'와 같은 사회적 갈등만 양산

□ 상황이 이러함에도 **연금개혁을 계속 미루면,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음**

◦ 네 탓이 아닌, 우리 탓이 되어야! 그러니 **동일연금(Common pension) 도입이 필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 방향** (2)

□ 본인 기여로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점차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

○ 현행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할 경우, **중간이상 고소득층의 수익비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

□ 정부재정으로 충당되는 **비기여 방식 연금제도인 기초연금**은

○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니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 **선별적이면서도 노후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

○ 비기여 방식인 기초연금 급여가 확대될 경우 **중간소득 이하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예상 가입기간 추이

Numbers of Contributing Years by Year of Birth and Income Level (IL)

	IL 1 0~10 %	IL 2 10~20%	IL 3 20~30%	IL 4 30~40%	IL 5 40~50%	IL6 50~60%	IL 7 60~70%	IL 8 70~80%	IL 9 80~90%	IL 10 90~100%	Average
1935	6.1	6.2	6.0	6.0	5.9	6.3	6.3	6.3	6.5	6.5	6.2
1940	7.7	9.4	9.7	9.5	10.5	10.9	10.0	10.5	9.8	10.4	9.8
1945	11.9	13.6	12.1	15.5	14.0	15.3	13.9	13.6	14.9	14.9	14.0
1950	15.8	15.2	17.0	18.2	19.3	20.4	20.4	20.1	20.8	21.6	18.9
1955	19.1	17.9	18.6	18.9	19.6	20.3	21.8	23.4	24.6	24.8	20.9
1960	21.3	19.3	19.1	20.1	21.7	24.3	25.1	27.4	29.6	29.5	23.7
1965	20.0	19.4	20.0	21.5	23.3	25.4	27.7	29.9	33.7	32.6	25.3
1970	19.4	19.8	22.0	21.9	24.5	25.4	28.1	29.0	33.2	33.9	25.7
1975	18.6	20.9	22.5	23.6	23.2	25.0	27.2	28.0	29.7	31.7	25.0

Source: Yun Suk-myung, Choi Ki-hong, and Choi Serim. ***Changing Working Conditions for Korean Baby Boomers and Tasks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우리나라 높은 노인 빈곤율의 실상 (1)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come Inequality

- Decile ratio by country (p90/p10 ratio), (2015~2018) -

	Total population				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ver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2017	2018
Korea	5.7	5.7	5.8	5.5	7.3	7.0	7.0	6.5
Japan	-	-	-	5.2	-	-	-	4.8
Finland	3.1	3.0	3.1	3.1	2.7	2.6	2.7	2.7
Sweden	3.3	3.3	3.3	3.3	3.1	3.0	3.1	3.0
Germany	3.7	3.8	3.7	3.6	3.2	3.2	3.2	3.1
Canada	4.4	4.1	4.1	4.0	3.5	3.4	3.4	3.4

Source: OECD. (2020).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 Statistics.

우리나라 높은 노인 빈곤율의 실상 (2)

Asset Distributions Among Seniors
by Source of Data (**2015**)

Both sources of data confirm that **the lowest and highest groups** comprise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of all Korean seniors** (with the asset groups defined by asset values at the 25th, 50th, and 75th percentiles).

Second, **the percentage of seniors in the high asset groups** is relatively **higher among seniors who are not income-deprived** (i.e., **not relatively poor**, according to the OECD's standard). **Of non-income-deprived seniors, 68.5 percent belong to the high asset groups**, according to the **KWPS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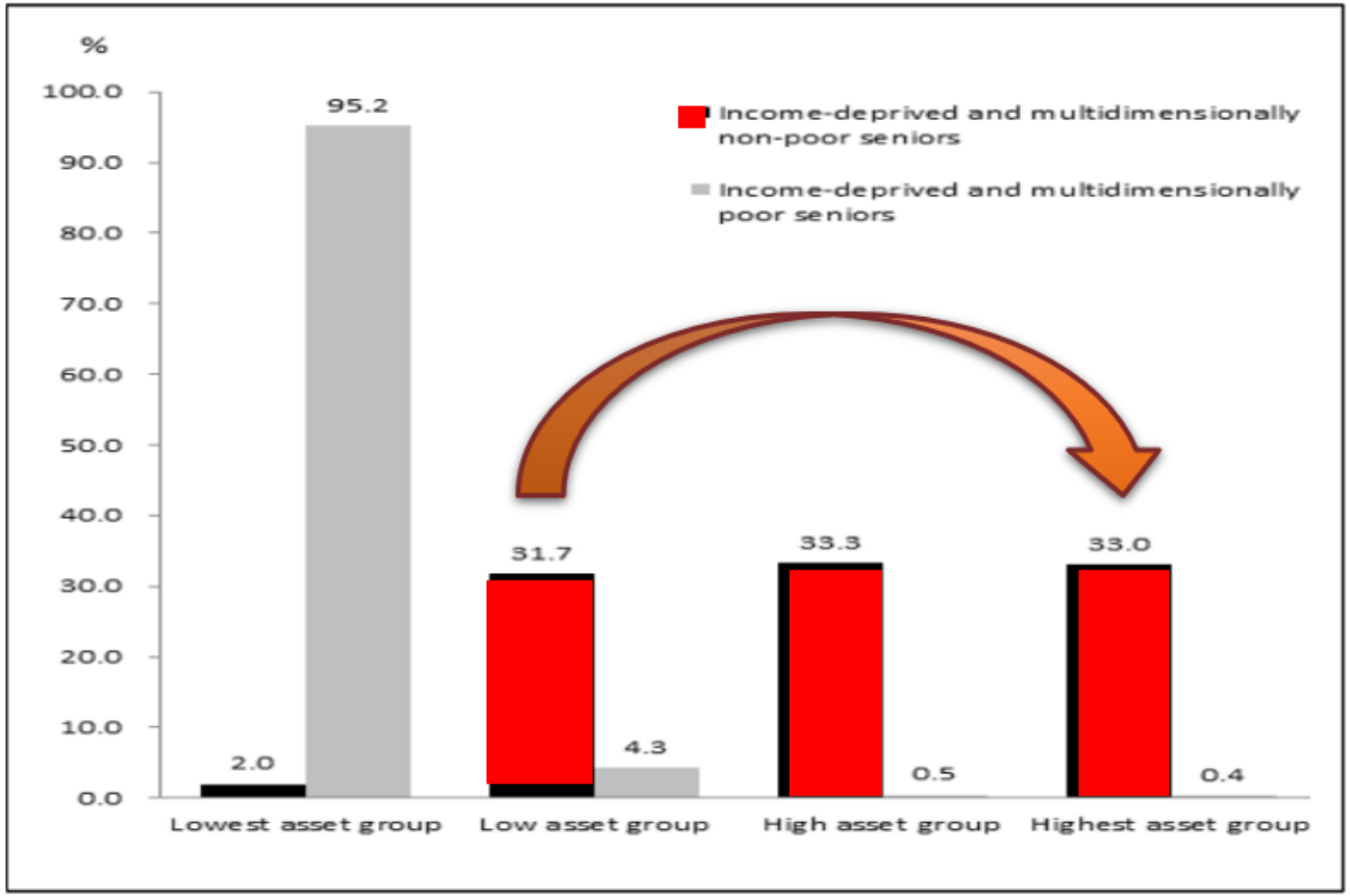
Third, **the percentage of seniors in the low asset groups** is **relatively higher among seniors who are income-deprived (i.e., relatively poor**, according to the OECD's standard). **Of income-deprived seniors, 63.4 percent belong to the low asset groups**, according to the **KWPS data**.

Source of data	Asset group distribution (%) (total assets per household member)				
	Total	Lowest	Low	High	Highest
KWPS					
All seniors (100%)	100.0	28.2	18.0	20.4	33.4
Not income-deprived (53.7%)	100.0	14.7	16.8	22.2	46.3
Income-deprived (46.3%)	100.0	44.0	19.4	18.3	18.3
Multidimensionally non-poor (55.0%)	100.0	2.0	31.7	33.3	33.0
Multidimensionally poor (45.0%)	100.0	95.2	4.3	0.1	0.4
HWFS					
All seniors (100%)	100.0	28.0	21.3	20.5	30.2
Not income-deprived (53.7%)	100.0	16.5	20.0	23.5	40.0
Income-deprived (46.3%)	100.0	41.5	22.7	16.9	18.9
Multidimensionally non-poor (55.0%)	100.0	3.5	36.3	28.3	31.9
Multidimensionally poor (45.0%)	100.0	96.1	3.0	0.5	0.4

Source: Sukmyung Yun & Kyongpyo Ko, ***Multidimensional Elderly Poverty Index***. Policy Report 2018-06. KIHASA.

우리나라 높은 노인 빈곤율의 실상 (3)

Total Asset Distribution Among Income-Deprived Seniors:
Multidimensionally Poor and Non-Poo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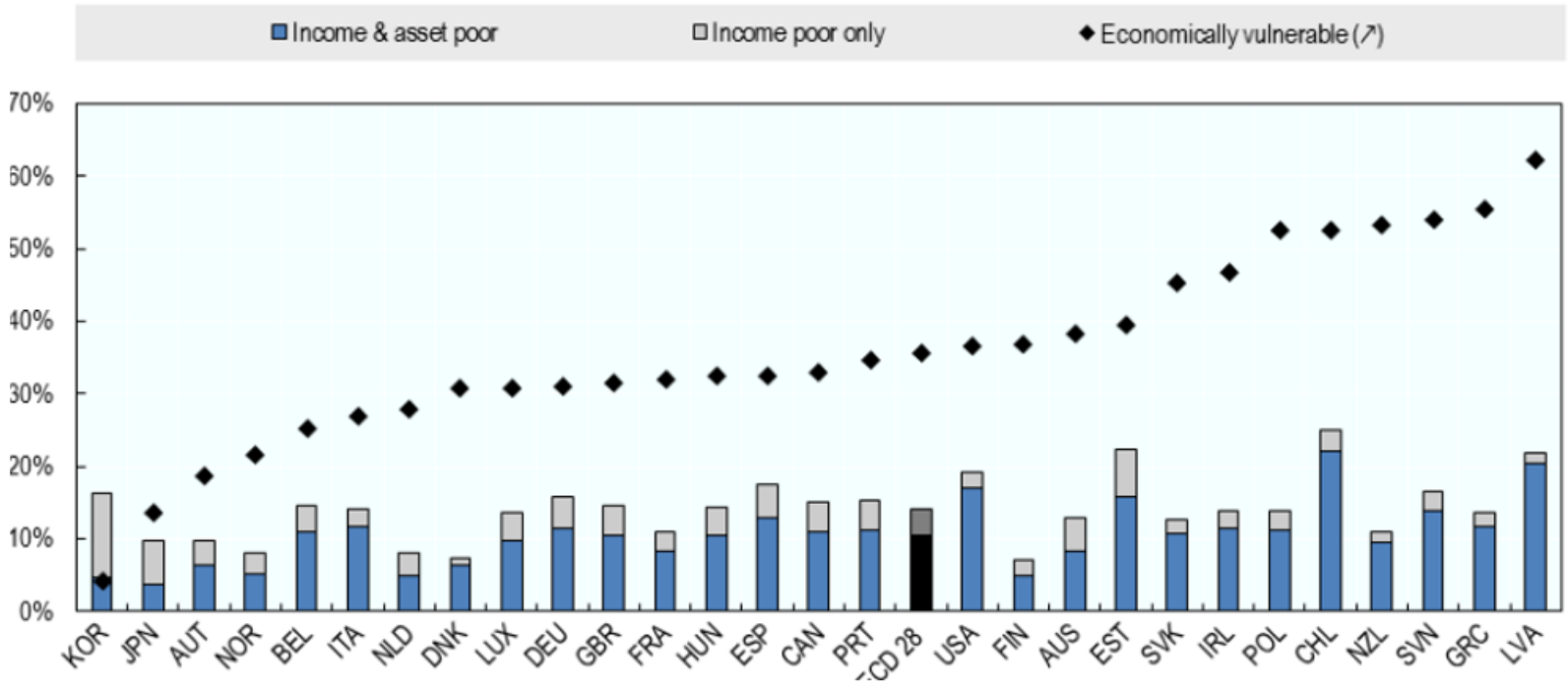
Note: **Asset values** were measured in terms of total assets, not wealth, divided by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re are **four asset groups**,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assets they possess, i.e., lowest, low, high, and highest.0
The lowest group belongs to the bottom 2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asset distribution; the low group, to the next 25 percent (26th to 50th percentiles); the high group, to the next 25 percent (51st to 75th percentiles); and the highest, to the top 25 percent (76th to 100th percentiles).
Currently (as of the end, 2015) *in Korea, the 25th percentile of the total population asset distribution per capita is KRW 31.48 million; the 50th percentile, KRW 74.33 million; and the 75th percentile, KRW 148.75 million.*

Data Sources: KIHASA-SNU (2016) and Statistics Korea (2016).
Source:
Source: Sukmyung Yun & Kyongpyo Ko, ***Multidimensional Elderly Poverty Index***. Policy Report 2018-06. KIHASA.

The Poverty Rate Is High ➡ Need to Reexamine

Percentage of individuals experiencing income and/or asset-based poverty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Note:
An individual is **classified as being in income poverty** if their equivalis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s **less than 50% of the national median** (income poverty line).

An individual is **classified as economically vulnerable** if they **are not income poor but their liquid financial wealth is less than 3 months of the national income poverty line**.

The OECD average is the simple country average.

Source: Carlotta Balestra, Richard Tonkin. **Inequalities in household wealth across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2018/01 .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 개편방향 (3)

□ **가처분 소득만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을 산정하는 **OECD 빈곤율 산정방식**이,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한국적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노인 보유 부동산을 **빈곤율 산정에 반영**하고, **간접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기여방식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의 현금급여 인상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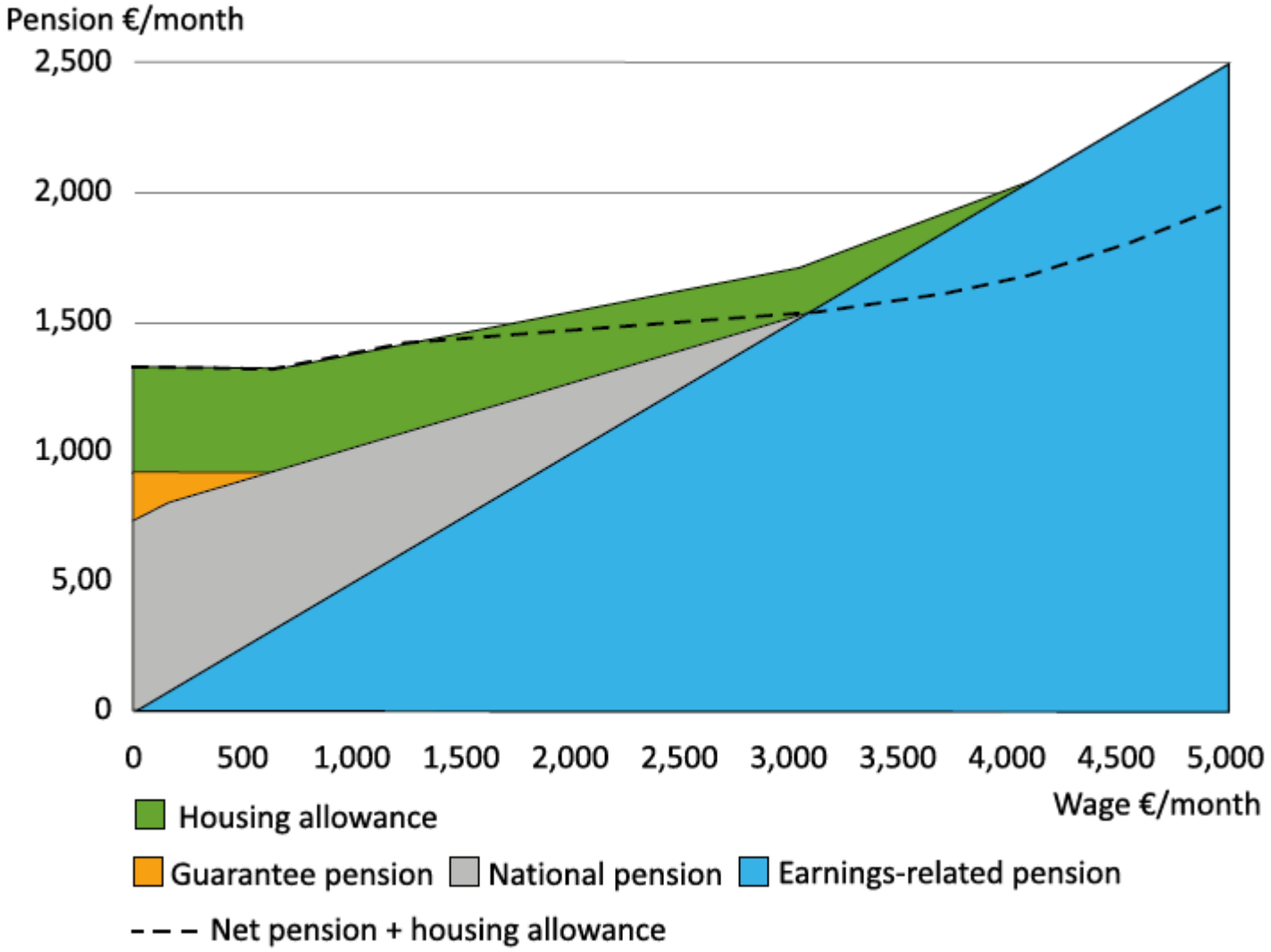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70%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 **2023년 1인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202만원에 고정한 뒤, 물가 상승율만 연금급여 지급에 반영**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상자 대폭 감소 가능**

◦ 10여년 전부터 **OECD가 제시한 권고안 수용** (**대상자 축소하고 취약노인에게 더 지급**)

- **한국 기초연금의 치명적인 약점(기초연금 수급노인의 1/3이 빈곤한 노인이 아님)**

핀란드의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포함한 연금액 (2023)



자료 : Suvi Ritola & Samuli Tuominen, 2023.

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는
24.85% (2023년)
(사용자 2/3 부담, 근로자 1/3 부담,
대신 **퇴직연금 없음**)

보편적인 기초연금 폐지
저소득 노인에게는 추가 지급

세금으로 운영하는 최저보장연금 도입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주택수당 지급.
소득비례연금 소득적용의 상한이 없음.

소득 재분배는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통해 달성
(저소득층은 연금 소득세 없음)

기초연금 발전방향

□ 현재 기초연금보다 지급액이 월등하게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2023년 1인 기준 월 62.3만원)**와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지급액(월 32.3만원)**은 **장기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하도록 함.

□ 기초연금은 기여방식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급여를 세분화하여 지급 (국가 기본선 즉, National Minimum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초연금 지급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세분하되, 기초연금 Part A(현금급여), Part B(주택 및 생필품 바우처), Part C (예;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 등으로 구분하여, 개인별 니드에 부합되게 차등 지급함.

◦ **초기 단계에서는 Part A, B, C를 합한 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으로 하되, **Part A의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월 35만원 이하)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노인 소유주택을, **핀란드의 주택수당 지급 대체 개념으로 활용하여 노인 빈곤율 산정**

◦ 저소득 노인 소유 주택의 **보유세 면제와 주택 수리 비용 보조 조치를 병행**함.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

□ 보험료 대폭 인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필요

○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전체 보험료 상당부분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달성하도록 함.**

- 2025년부터 **매년 0.6%p씩 10년 동안 인상**하여 **2034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5%로 인상**

○ 재정 안정 달성에 필요한 **나머지 보험료 인상분**은

- 핀란드 식의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적용**
- **생애 연금 지급액 총액은 동일**하나,
-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만, 매년 연금지급액에서 삭감하는 방안**임.

□ 이러한 방식은, **재정안정 달성은 가능한 반면에, 급여 적절성 문제를 야기시킴.**

○ **고령근로 장려**를 통한 **연금 수급연령 연기(즉 연금 가입기간 증가)를 통해 줄어든 연금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유도 (**현재 핀란드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와 누적적자 공개 필요성

□ 2023년 현재,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으로 추정됨.

◦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미적립부채가 8,572만원에 달함.**

◦ 2021년 한 해에만 공무원 재직자 1인당, **약 2,350만원의 연금충당부채가 발생**

- 이러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절반 이상을 미래세대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175조원의 미적립 부채가 발생한 사학연금**은,

- 33만명 가입자 **1인당 5억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충당부채 & 미적립부채**가 **GDP 대비 최소 135%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상황이 이러함에도 **내 탓은 없고, 남의 탓만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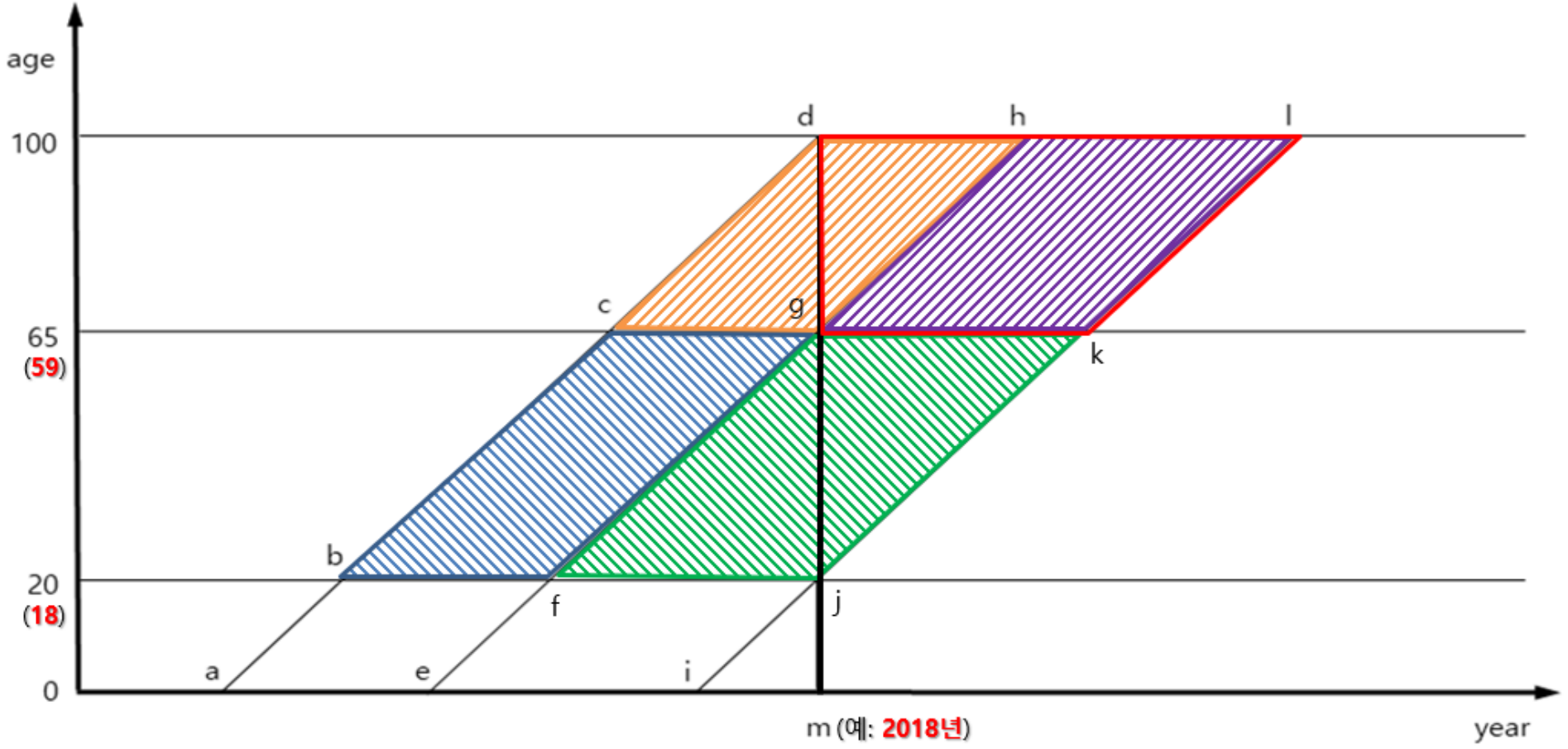
◦ 서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또는 국민연금이 먼저 개혁해야, 그 이후에 개혁하겠다고 함.**

Lexis diagram에 근거한, 유한기간 재정평가 문제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추계 기간을 현행의 70년보다 더 늘려야 하는 이유

– **2018년 4차 재정계산**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60%의 보험료 낸 것은 모두 반영**된 반면에,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의 상당액이 누락되어 있어, **낙관 편향 재정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임.



출처 : 최기홍(2020 & 2021), 공적연금 주제 관련하여 발제자(윤석명)와의 1대 1 줌 회의 자료.

공적연금에 대해 무한기간 재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 CPP 재정추계 보고서가 지적한 유한 기간 재정평가의 문제점 -

"**the use of a 75-year projection period** for the open group balance sheet could be viewed **as insufficient.** In general, by limiting the projection period, **part of the future expenditures for cohorts** that will enter the labour force during that time **are excluded from the obligations**, while **most of the contributions for these cohorts are included in the assets**."

(CPP, Actuarial Study No. 13, p.22)

재정추계 기간 연장과 강제적인 재정안정화 조치 규정 마련 필요성

□ 70년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추계기간을 **최소 80년 이상으로 10년 더 연장**하고,

○ 재정추계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함.

○ 연금재정추계 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절차(Peer review) 도입**

□ 정치권에서 필요한 재정안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 **재정안정 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 추진이 필요**

○ (예) 캐나다연금(CPP)은 정치권에서 필요한 재정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 **3년 주기의 차기 재정계산 시점**까지 **재정 불안정 요인의 50%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규정**이 있음.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을 소홀히 할 때 캐나다가 적용할

강제적인 연금재정 안정화 규정

Insufficient rates provisions serve as a safety net in case of political impasse

" Insufficient Rates" Provisions

If the minimum contribution rate is higher than the legislated contribution rate

AND

if the federal and provincial finance ministers cannot reach an agreement

THEN insufficient rates provisions apply

- Contribution rate increased by ½ of excess over three years
- Benefits frozen until next review (3 years)
- The next review will determin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Plan

출처: Michel Montambeault, Reform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Canada Pension Plan, 2022.

공적연금 통합운영의 필요성

Fully integrated	*Separate but similar benefits*	*Fully integrated with top-up*	*Entirely separate*
Chile (1981)	Finland (1995)	Australia	Belgium
Czech Republic	Luxembourg (1999)	Austria (2004, 2009)	France
Colombia	Netherlands	Canada	Germany
Costa Rica	Sweden	Denmark	**Korea**
Estonia		Iceland	
Greece (2011)		Ireland (1995)	
Hungary		Mexico (2007)	
Israel (2002)		Norway	
Italy (1995/2008)		Slovenia	
Japan (2015)		United Kingdom	
Latvia		United States (1984)	
Lithuania			
New Zealand (2007)			
Poland			
Portugal (2006)			
Slovak Republic			
Spain (2011)			
Switzerland			
Türkiye (2006)			

Source: *2022 OECD Korean Pension Review*.

Korea is **one of only four countries** along with Belgium, France and Germany that has maintained **a completely separate pension system**.

After moving from the current an **entirely separate system** to a **separate but similar benefits system**, it seems **feasible** to move to a **fully integrated system in the second stage**.

2022년 OECD 권고 - 공적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함

□ **중단기적으로** 공적연금의 **통합 관리 운영(동일연금)**을 추진함.

○ **제도 이행비용 등을 감안**하여, 미국식 일원화 모형이 아닌, **2015년 일본의 Common pension(연금 일원화) 개혁 내용을 채택**

○ 즉, **연금 급여율만 통일**시키고 제도 운영은 **당분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이원화(재정 분리)** 시킴으로써, **이행 비용 최소화와 재정 통합에 따른 형평성 문제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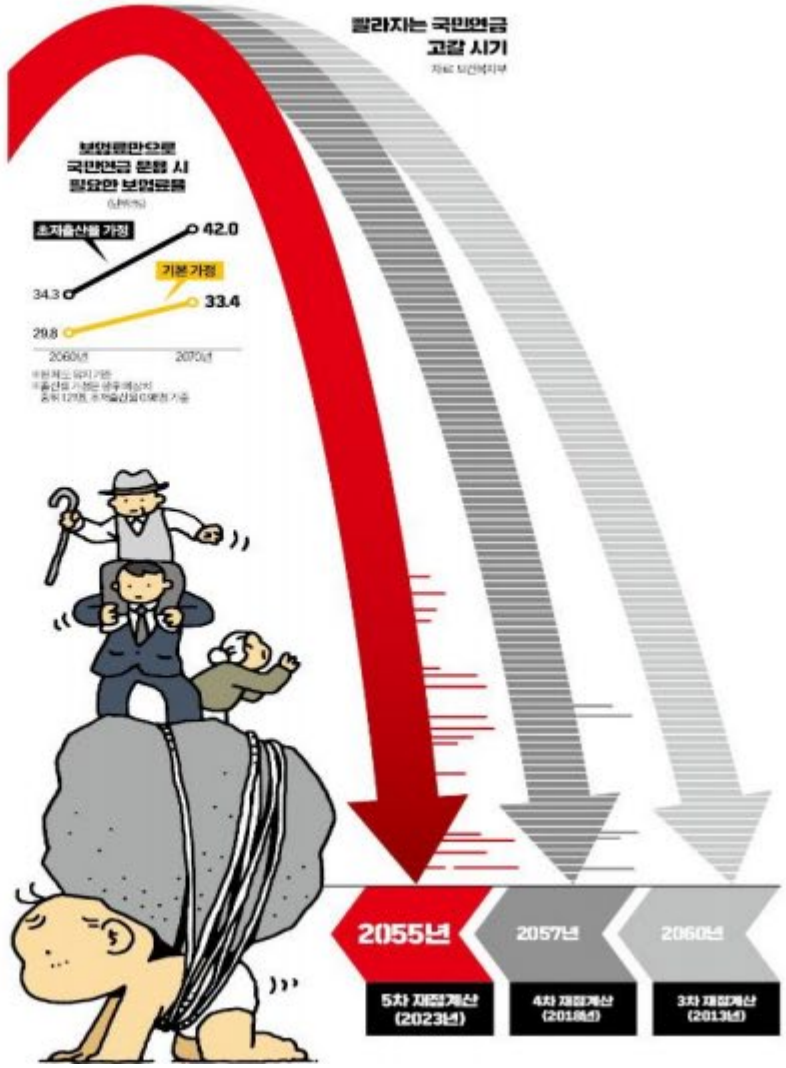
□ 연금재정과 제도통합이 아닌 (즉, 별도 제도로 유지), **연금산정소득과 소득재분배 등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임

○ 공무원에게도 **민간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을 지급**(**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9%에서 4.5%를 퇴직금으로 전환**)

○ **공무원이 민간부문보다 더 부담하는 보험료(4.5%)**에 대해서는,

-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함.

칼날 위의 균형과 같은 매우 어려운 상황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3. 3. 31)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번 돈 42% 보험료로 내야할 판"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의 시급성

현황

- ✓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는 중이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로 고정

문제점

- ✓ 가입연령은 고정한 상태로 수급연령만 조정하고 있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도 증가하여 노후소득보장 저해
  - ✓ 60~64세의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개선 방안

- ✓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추가적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소득이 없는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 ✓ 2033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지역가입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중단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필요

일본의 연령 계층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2013,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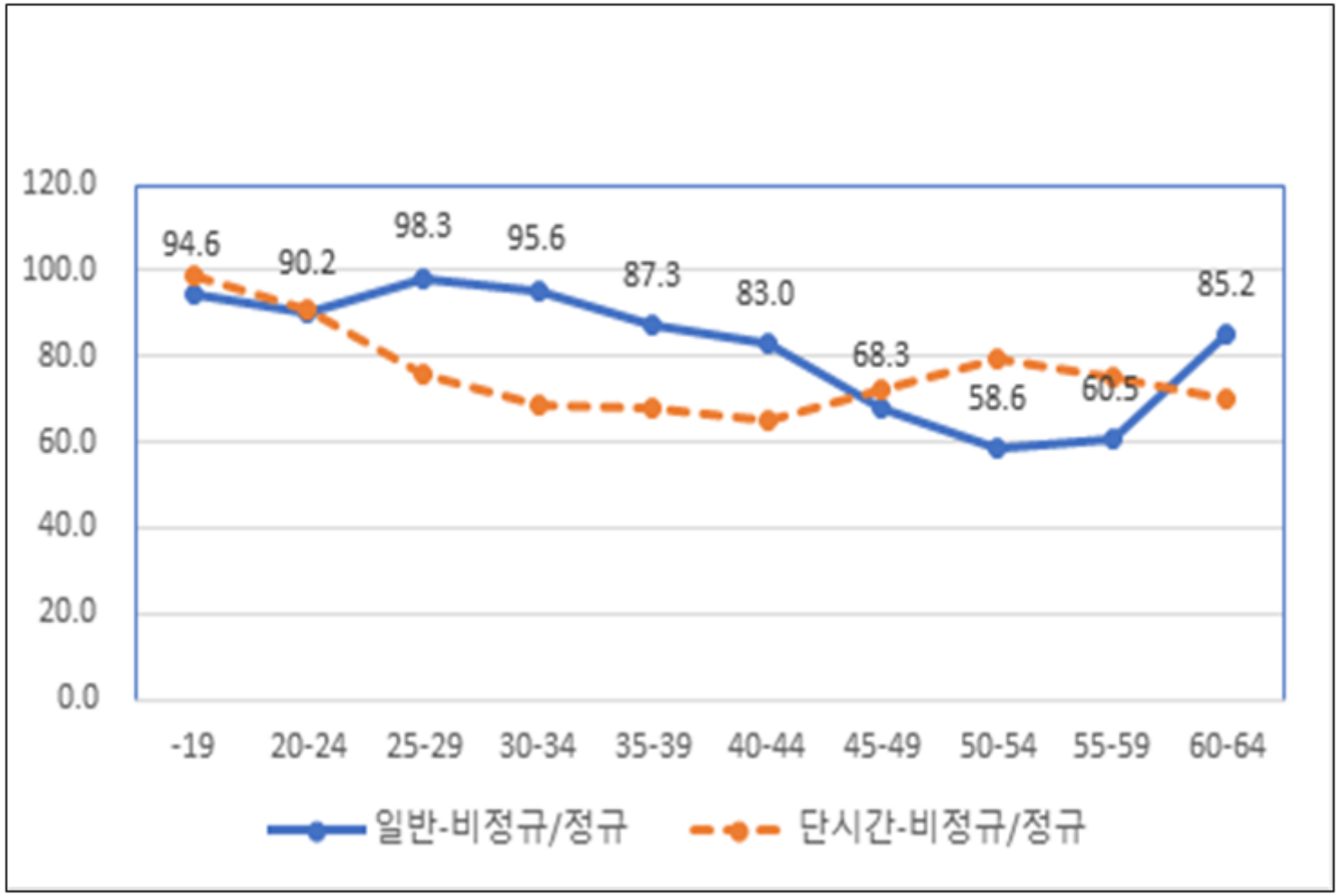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2013년	2018년	2013년	2018년	2013년	2018년	2013년	2018년	2013년	2018년
고용자 총수	100									
임원	8.9	7.7	12.6	10.1	19.0	13.6	27.6	20.9	43.5	34.6
정규	59.5	60.2	32.2	33.9	22.0	20.8	19.4	17.2	21.7	17.3
비정규	31.6	32.1	55.1	56.1	58.6	65.7	53.1	62.0	32.6	48.1

자료: 総務省 統計局. (2019). 労働力調査 (詳細集計) 平成30年 (2018年) 平均 (速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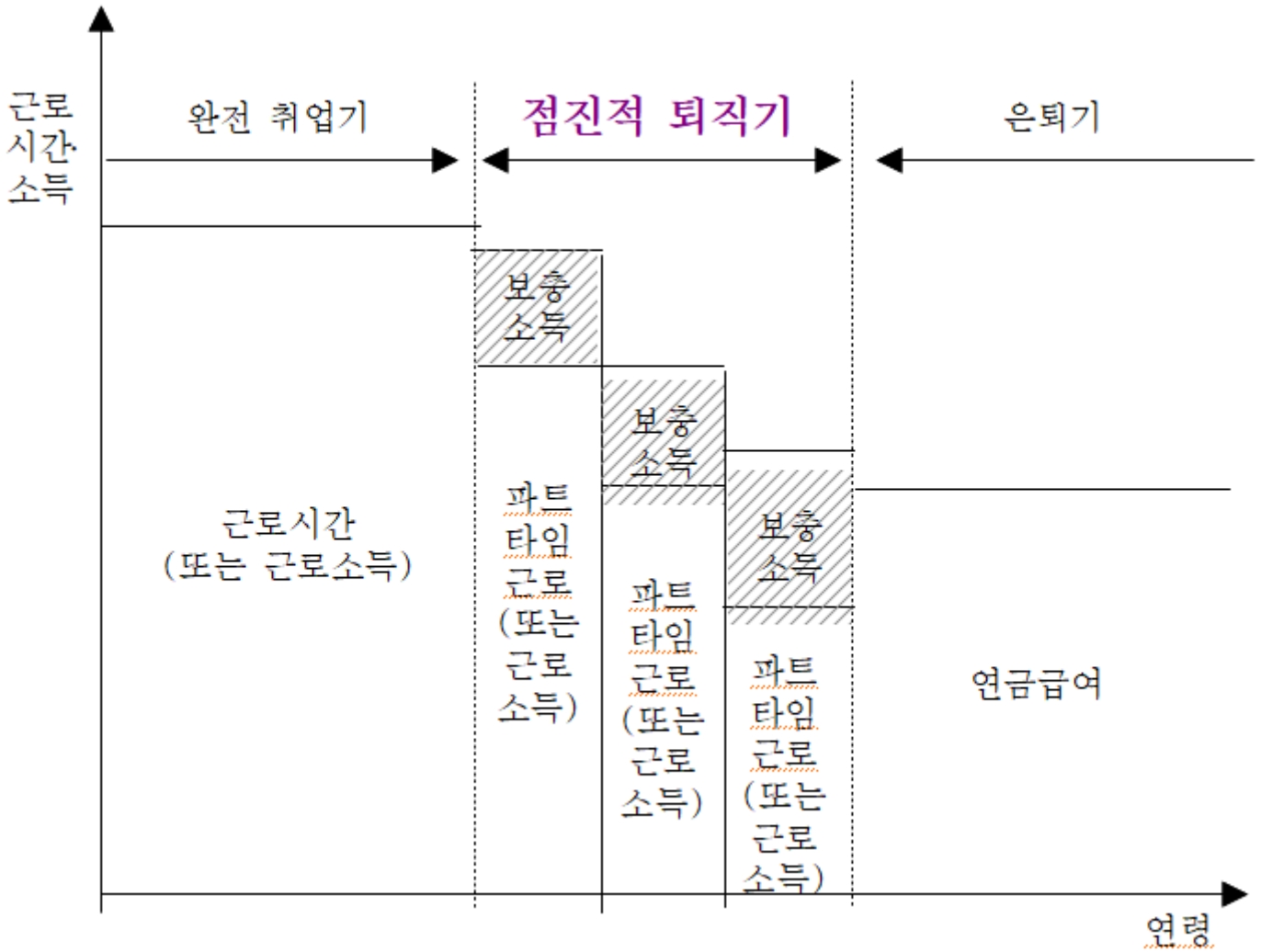
일본의 연령 계층별 비정규/정규 임금 비율 (2018년)

(단위: %)



자료: 厚生労働省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2018년 雇用形態別表

점진적 퇴직의 이행 과정



자료: Schüle. (1988). Flexibilisierung der Altersgrenze – Beiträgezur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윤석명 외(2019)에서 재인용

Live Longer !

Work Longer !

Encouraging to contribute for a longer period.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eople
with People
in Mine

Thanks a Lot !

감사합니다 !

Appendix

A Reexamination of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 Korea*

2024.05.30

Yun Suk-myung (Sukmyung Yun, 尹錫明, 윤석명)

Honorary Research Fellow, KIHASA
Lead, Pension Research Association
Chairman, Pension Reform Division, Reset Korea Campaign
Former President, Korea Pension Association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2.1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 Korea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KOREA

OECD

LAUNCH VERSION

2.3 Executive Summary ➡ Reexaminations

-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safety-net pensions** since **2007**
  - Has provided **small benefits** to **the most needy**. (➡ **NOT correct**)

  ➡ **(1/3 of safety-net pension beneficiaries are NOT in poverty.)**

-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much more needs to be done**.
  - The current DB system **generates low pension levels**, leading to significant income vulnerability in old age

  ➡ (Partially valid, but **likely to lead** to incorrect policy recommendations)

  ➡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difference in subscription period b/w subscribers**, **not the average subscription period** of the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 **One severe difficulty** arises from
  - The **exceptionally fast demographic changes** facing Korea, which implies that **even these low future pension levels cannot be financed in a sustainable way without further important reform**.

2.5 Executive Summary ➡ Reexaminations

- As contribution levels are **low** & the pension system **remains fragmented**,
  - There is **number of reform options** to make the Korea pension system **better fit for purpose**, raising old-age protection in **a sustainable way**.

- OECD review **focuses** on **pension policies** to improve contributory pensions.
  - Even though **contributory pensions interact with the means-tested basic pension component**, **this review does not include recommendations to improve old-age safety nets**.
    - ➡ (It is highly likely that **inappropriate policy recommendations** will be presented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super-aged society.)

2.6 Executive Summary ➡ Reexamination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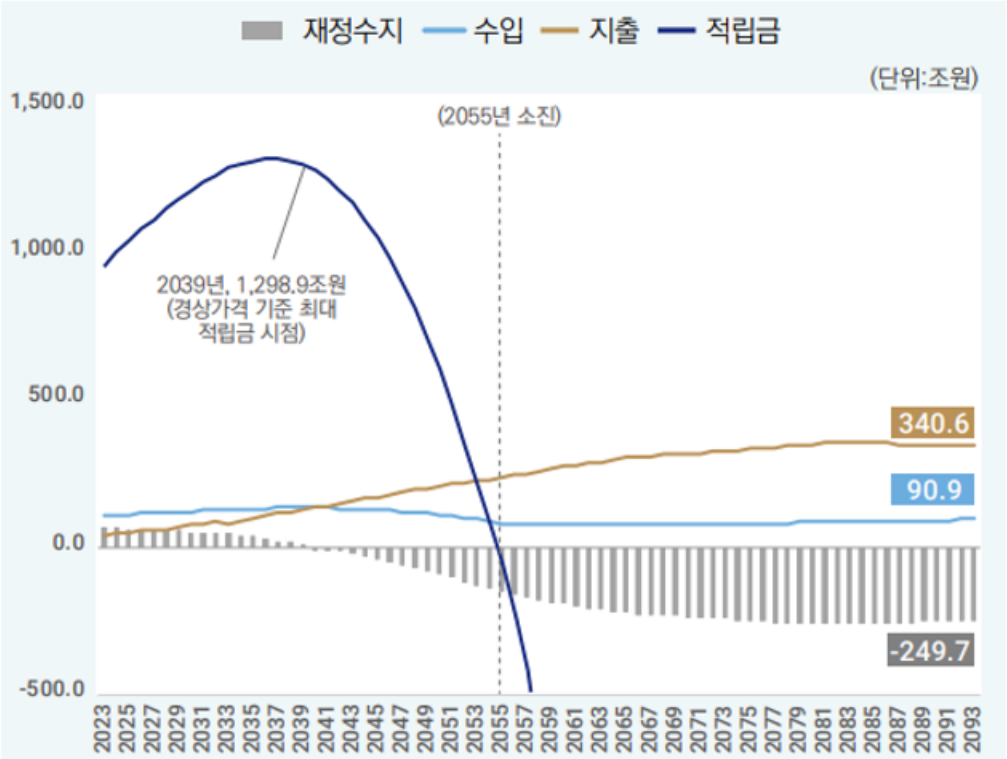
-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proposed policy measures
  - Would be **enhanced by labour market changes**, primarily related to the practice of **enforced retirement before the *statutory retirement*** (➡ **pension eligibility**) **age**, itself closely related to seniority-wage practices.

- Yet, labour market reforms are **not within the remit** of **this (OECD) review**.
  - ➡ (Also**, might cause serious misleading in desirable policy recommendation**)

2.7 Recommendations ➡ Reexaminations

- **Increase** NPS contribution rates **considerably and as soon as possible (fully acceptable)**
  - Use **additional resources** to ***increase accrual rates*** **in a financially sustainable way** and to preserve **at least** ***a small reserve fund*** **(Unacceptable. NOT sustainable recommendation)**

Long-term Projection of NPS (Baseline): 2023~2093



Changes in Case of **2%pt Increase in Replacement Rate** (from 40 to 42%) of the NPS

Source: NABO

2.14 Recommendations ⟶ Reexaminations

- **Raise the wage ceiling** to contributions substantially. **(fully acceptable)**

- **Finance some pension redistributive components** from **the state budget.** (**Unacceptable**)

  ➡ Although the current NPS has **an income distribution portion (A value)**, **progressive income redistribution is not working** due to the **extremely low insurance premium rate**.
  A regressive redistribution to high-income people who have been enrolled in the national pension for a long time is **proceeding**, while passing on the enormous financial burden **to the next generation**.

  ➡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many of the vulnerable**, such as low-income local (individual) subscribers, **are excluded** from the national pension, the **regressive phenomenon** will **be aggravated** if **the state budget is used** to finance it.

  ➡ While **transforming**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into **a financially sustainable income-related pens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basic pension (safety-net pension)** operated with state financ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2.15 Recommendations ➡ Reexaminations

-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ension system of all eligible individuals,
  - By **improving co-ordination** with tax authorities to verify income levels for the individually insured & Increasing penalties for employers who do not enrol their workers. (**acceptable**)
- Link the retirement age to **life expectancy**,
  - **Reduce the current 5-year gap** b/w the early & the statutory **retirement** (➡ should be modified as **pensionable**) ages and **consider moving faster** to age 65. (**Conditionally acceptable**)
    - ➡ **Unfeasible** if **NO** labour market reform
- Fully permit combining work & pension receipt from the statutory retirement age
  - By **removing the earnings ceiling** beyond which pensions are reduced. (**acceptable**)
- Extend the duration of both unemployment & childcare credits
  - And include the first child in the latter. (➡ **Need to recommend more specifically**)
    - ➡ **Need to extend military service credits and finance from general tax revenues, Not by NPS fund.**

3.1 2022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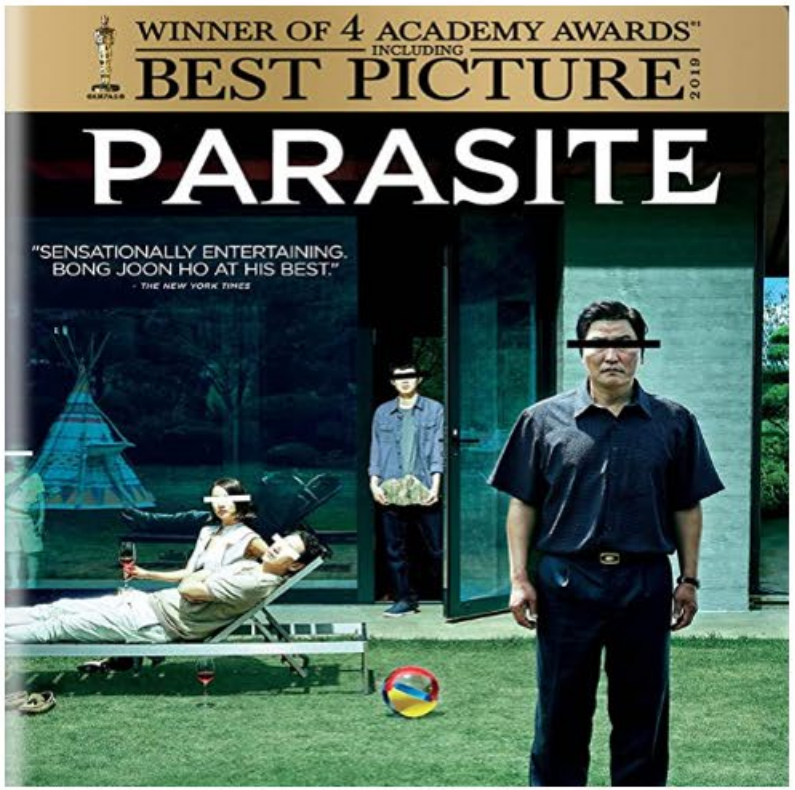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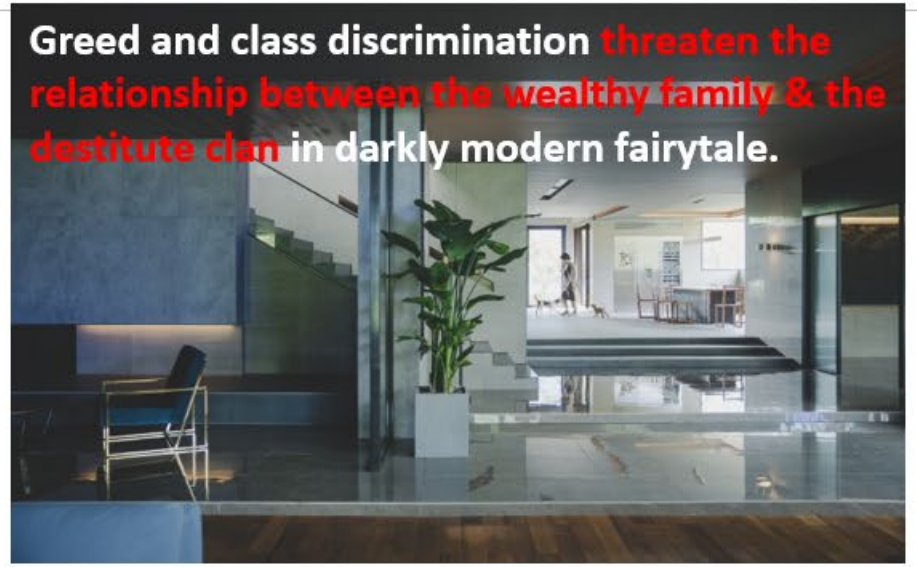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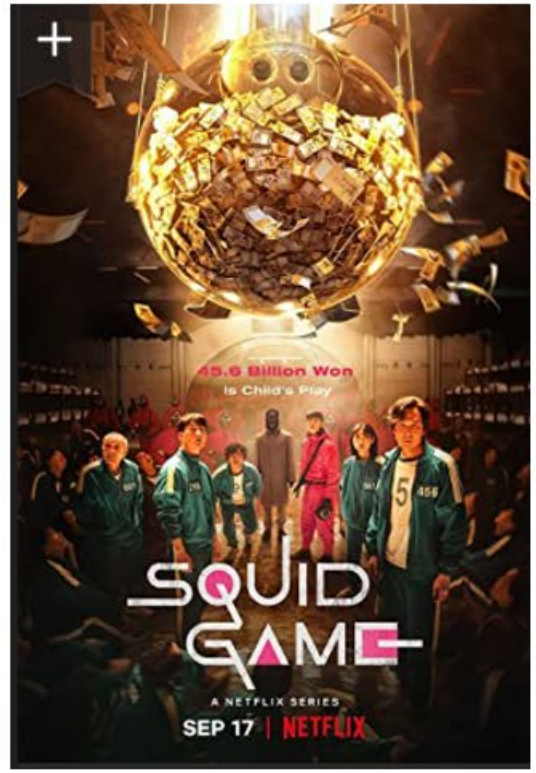
3.3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atirizes the gap b/w the rich & the poor in Korean society through two families living in a luxurious house and **a semi-basement house.**







3.6 2022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ursue **a broad pension reform** to secure adequate old-age income.
  - In this context, conditional on the reform of the NPS, **consider lowering the basic pension income threshold and increasing the benefit level to better target those with the highest needs. (Fully agree & acceptable recommendation)**

- **Raise** the pension eligibility age **further than** currently legislated (**age 65**) by 2035
  - And **link** it to **life expectancy thereafter**,
  - Align the maximum contribution age **to the pensionable age**. (**Fully agree but need for social consensus**)

- Transition severance pay into individual pension accounts
  - By capping and gradually reducing the amount available for early lump-sum withdrawals and limiting permitted causes. (**Fully agree but need for social consensus**)

4.6 Encouraging More Workers to Contribute By Extending DNSISP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uru Nuri Social Insurance Support Project (DNSISP)

- **To encourage more workers to contribute**,
  - The gov't introduced the **DNSISP** **in 2012** which pays a percentage of both the worker & the employer pension contribution.
  - To be eligible, individuals must be employed in **workplaces with fewer than 10 workers & earnings under KRW 2.15 million per month (minimum wages)**, around 50% of average earnings.

- Since the introduction of DNSISP, coverage has expanded **rapidly**.
  - However **approximately 98.5% of the programme cost** was **a deadweight loss**: the large majority of subsidized people would have been insured without the subsidy.
  - Currently, DNSISP plays a role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rather than policy measures **to reduce gaps in NPS coverage**. Put it differently, **DNSISP is NOT well-targeted.**

- **Main reasons of policy ineffectiveness** comes **from excluding of major target groups.**
  - **Need to urgently extend** to **low-paid individually insured workers**, **NOT** individuals in workplaces.